

국민 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2012 vol.26 05+06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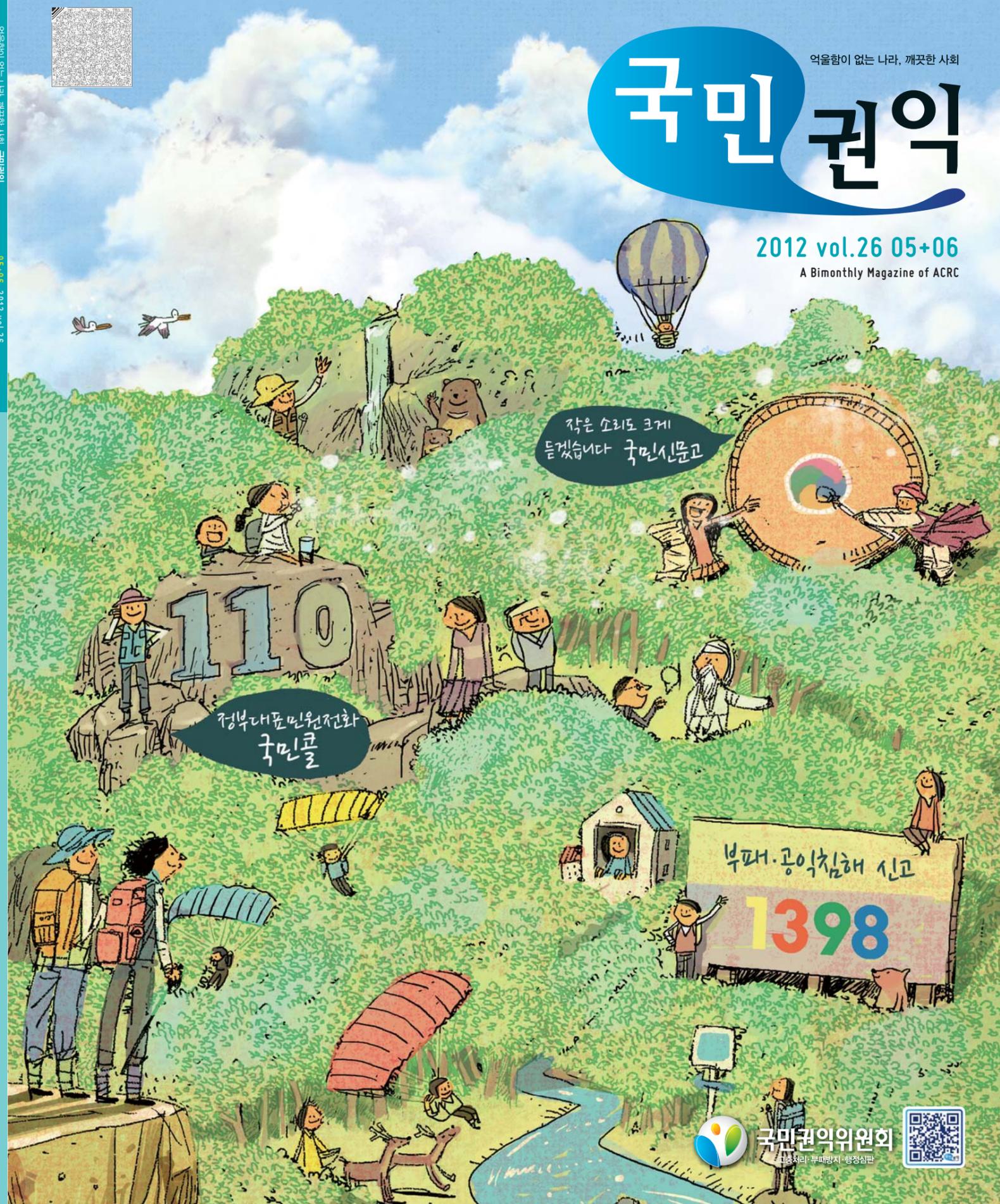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여러분과 함께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www.acrc.go.kr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침해 신고
1398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담합 행위 등



05+ 06

국민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2 VOL.26 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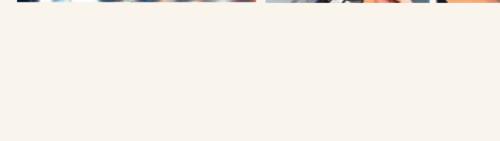
발행일 2012년 6월 13일
(격월간, 통권 26호, 비매출)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 | 디자인 | 인쇄 조선뉴스프레스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 / 획 / 특 / 집

- 02 커버스토리
인터넷 정책토론 문호 '활짝'
온라인 소통 국민과 '통했다'
- 06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현장서 듣는 말들이 법정보다 생생하고 절절"
- 08 이슈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6개월
공익침해 신고 4만4508건
'소비자이익' 관련 88%로 최다
- 12 전문가 제언
국민권익위원회 역할과 나아갈 길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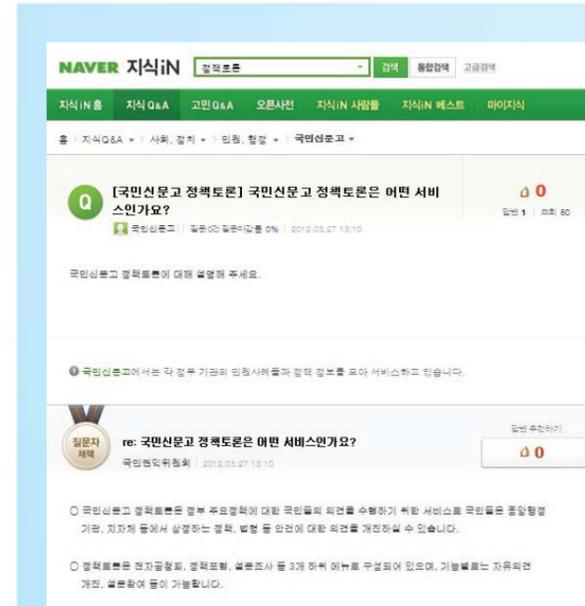
- 공 / 감 / 누 / 리
- 14 110콜센터 개소 5주년
무슨 고민이든 연락주세요!
- 16 우리 이렇게 일해요 - 부패방지국
반부패 선봉대... 공정사회 앞장간다
- 18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3년 연속 '청렴 1등급' 한국공항공사 김석균 팀장
- 20 글로벌 권익위
동남아 교민·기업들... "고충을 말해 봐!"
- 22 글로벌 권익위
'청렴도 측정'제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 받았다
- 소 / 통 / 누 / 리
- 24 권익위가 갑니다
경남 양산 이동신문고-민원청취 현장
- 28 경북 고령 조정회의 현장
설득과 타협... 농민들 피해보상 길 열었다
- 3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심판-고충민원처리 통해 국민불편-민원 4건 해소
- 34 위원장의 편지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명칭이 됩시다"
- 행 / 복 / 누 / 리
- 36 여행 | 전남 여수
맛과 멋의 고향... 엑스포로 새 단장
- 40 시네마 토크 | <천국의 아이들>
소외된 학교 문제아들 사회에 해결책을 묻다
- 42 건강 다이어리
'가족력'을 보면 가족 건강이 보인다
- 44 역사속 권익 | 청백리
'청백리는 선비의 표상'
- 46 스포츠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올해 꿈은 런던의 '여왕'
- 48 컬처&컬처
전자책은 패스트푸드... 독서식탁 메뉴 넓혔다
- 52 알아두세요
'사회의 독버섯'... 불법사금융 척결 나섰다
- 53 이 환경의 책 | <러쉬>
경쟁은 '인간 존재의 이유'
- 54 뉴스&피플
- 56 독자와의 대화



인터넷 정책토론 문호 ‘활짝’ 온라인 소통 국민과 ‘通했다’

국민 불편·사회적 갈등에 선제적 대응으로 정책에 반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목표 사업 중 하나가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전자공공토론’ 활성화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정부 주요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에 나선 이후 스마트폰으로의 접근도 개선하고 인터넷 정책토론의 문호를 넓히는 등 온라인 소통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 소통강화는 국민 불편과 사회적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규모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글·박경아 기자



네이버 검색 이렇게 달라졌어요!

- 1 온라인 정책 토론 참여가 쉬워요!** 국민적 관심 이슈에 대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검색영역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가령 네이버에서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에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노출된다.'
- 2 네이버 검색창에서 '민원'을 입력하면 상담신청이 간단해져요!** 네이버 검색창에 '민원' 이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정부 대표전화인 110콜센터(www.110.go.kr)의 민원 신청·상담 등의 메뉴가 검색창 하단에 바로 검색된다.
- 3 네이버 질의응답 서비스인 '지식iN'에서도 금세 답을 찾아요!** 네티즌이 국민권의 보호와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등록하면 권익위가 직접 '대표 전문가'(지식파트너)로 나서 공신력 있는 양질의 답변을 한다.



김영란 위원장이 5월 10일 분당 NHN그린팩토리에서 NHN 김상현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악수를 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첫째,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미스 매치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웬찮은 일자리’로의 청년층 취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수요와 무관한 고학력 추구 경쟁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취업연령과 취업 시 최소 요구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구직자의 눈높이가 상승해 청년층 취업이 저해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 수요는 넘치다 보니 취업경쟁에서 탈락한 고학력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군으로 몰려드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 특히 전문대졸 이상의 상당수 고급인력이 그에 맞지 않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고용환경이 불안한 사업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4년제 대학 출신들은 석·박사와 해외 유학파와 경쟁해야 하며 대졸자들은 고졸취업자 및 저학력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청년 일자리, 여러분이 만들어주세요!’라는 주제를 놓고 청년 일자리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뜨거운 정책토론이 벌어진 뒤 네티즌들이 제시한 의견들이다.

전자공청회·정책포럼·설문조사로 운용
● 자신을 32세의 구직자로 밝힌 한 네티즌은 “현재의 일자리는 부족하다기보다 일자리의 불균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며 “올해 삼성그룹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모집에 5만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지만 오늘도 취업사이트와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제한 청년 일자리 정책토론에서 모두 1925건(국민신문고·182건, 네이트·1549건, 다음·194건)의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신문고는 범정부적 인터넷민원 포털사이트로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공간이다. 주요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권익위가 올해 업무계획의 하나로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전자공공토론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화하고 있는 온라



인 소통방법 중 하나이다.

권익위는 특히 2040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지난 2월 20일 '영유아 지원정책(2월 20~26일), '부정청탁 금지법'(2월 20일~3월 2일)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시행하며 양방향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영유아 지원정책은 민원, 언론보도, 민간포털 토론방 등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 국민들의 가장 큰 정책이슈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일자리,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중요 정책이다. 실제로 공공·민간분야의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보여 이번 토론에 12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일반 네티즌은 371건의 의견을 남겼다.

부정청탁금지법 역시 알선·청탁 등 고질적인 폐해를 타파하고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한 단계 높여 선진 청렴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다.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사업은 국민 권익강화의 일환으로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별히 이슈화되는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민원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네티즌 의견 종합분석 후 관계부처에 전달

- '청년 일자리, 여러분이 만들어 주세요!'라는 주제를 놓고 정책토론이 시작된 4월 25일 국민신문고에서 하루 동안 같은 제목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권익위는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쇼핑물의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설문조사에는 1705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간·비용 절감, 상품 정보 및 비교검색 등 각종 편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구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전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로 인터넷 쇼핑물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인터넷 쇼핑의 비대면 거래, 선불식 거래 관행과 쇼핑물 개설·폐쇄의 용이성 등으로 인한 반품, 환불, 개인정보 노출 등 각종 피해도 같이 증가해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해 왔다.

지난해 인터넷 쇼핑과 관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3215건이었으며, 인터넷 쇼핑물 거래 규모는 2010년 25조원에서 2011년 29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권익위는 이번 인터넷 쇼핑물 소비자 피해 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규정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과 피해실태를 파악,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권익위가 진행하는 정책토론 프로세스는 이슈 파인딩-안건 선정-토론 진행-사후 관리의 4단계로 진행된다.

민원동향, 언론동향, 민간포털 토론방 모니터링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를 발굴·분석해 '이슈 파인딩'을 하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안건 선정'이 마무리된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서 공공·민간전문가 패널구성, 찬반투표·설문조사·댓글달기 등 안전에 따른 최적의 기법을 적용해 '토론 진행'을 마친 뒤에는 언론보도 등 대국민 피드백, 고충민원·국민제안·제도개선 연계, 정책자료(국민의 소리) 부처 제공 등 '사후관리'가 이어진다.

권익위는 청년일자리 정책토론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

의 대책 수립을 위한 네티즌 의견을 듣고 종합분석한 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소통문화 확산 위해 네이버와 협력관계 구축

- 권익위는 정책토론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를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10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NHN 그린팩토리에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국민들의 민원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정책토론 참여가 한층 쉬워졌다. 네이버는 국민적 관심 이슈에 대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검색영역 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네이버에서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에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 대한 안내와 함께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노출된다.

민원 검색도 빨라졌다. 네이버에서 '민원' 이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면 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와 정부 대표전화인 110콜센터(www.110.go.kr)의 민원 신청·상담 등의 메뉴가 검색창 하단에 바로 검색된다.

네이버 질의응답 서비스인 '지식iN'에서도 권익위의 전문적인 답변을 들



5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NHN이 업무협약 체결 후 향후 업무협약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 있게 됐다. 네티즌이 국민권익보호와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등록하면 권익위가 직접 '대표 전문가(지식파트너)로 나서 공신력 있는 양질의 답변을 해 준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영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네이버와의 업무협약으로 국민들이 민원신청 및 상담서비스를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보다 수준 높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연내 모바일 정책토론 기능 개발 계획

- 권익위는 지난 2월 27일부터 민원·제안신청 기능 등이 포함된 국민신문고 앱 서비스를 아이폰 등 모든 스마트폰 기종으로 확대해 온라인 세상과의 소통 확대에 지속

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민신문고와 스마트폰의 결합은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지난 2월부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의 처리 결과를 클릭 한번으로 민원인에게 우편 발송할 수 있는 'e-그린우편 서비스'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 결과를 국민에게 보내줌으로써 소통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e-그린우편 서비스'는 전자문서로 우편물을 접수받아 내용물 출력력을 포함해 우편물제작에서 배달까지의 과정을 우체국에서 대신하는 서비스로, 수취인 인근 지역의 제작센터에서 '우편물 편지봉투 자동봉입 시스템' 등으로 우편물이 제작된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뤄지는 온라인 정책토론은 행정전반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분야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정부와 국민 간 효과적인 국민소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현장서 듣는 말들이 법정보다 생생하고 절절”

취임 직후부터 고충민원 현장조정에 적극 나섰던 김영란(金英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발걸음이 최근 들어 더욱 바빠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 들어서만 광명시 역세권 아파트 소음, 부산 낙민동 학교용지 문제, 경북 고령의 수박농가 피해 등 실타래처럼 얽힌 민원들을 조정하는 등 민원인들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글·오동룡 기자/사진·서경리 기자



김영란 위원장은 “30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민원인들 간 첨예한 이해 대립을 풀어 내는 일을 한 것이 현장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권익위 중재로 마련된 신뢰성 있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게 된 만큼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법정에서 판사로 계실 때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는 현장을 누비실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법정에서 듣는 이해당사자들의 말보다 현장에서 듣는 말들이 더욱 생생하고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풀어가려 합니다.”

직접 찾아보신 민원 현장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 울산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LH공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2007년 LH공사가 울산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혁신도시와 인근 마을 사이에 높이 10m, 길이 150m의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마을 주민들은 옹벽을 설치하면 바람을 막고 조망권을 해치는 데다

혁신도시와 마을 간 통행이 단절된다는 거였어요.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옹벽을 자연경사면으로 바꾸고 혁신도시와 민원이 제기된 구도심을 연결하는 길이 220m의 진입도로를 설치하자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LH공사와 마을 주민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2년 동안 표류하던 민원은 해결됐습니다. 철옹성 같던 병풍 옹벽이 허물어지면서 혁신도시와 구도심은 연계성이 높아졌고, 마을 주민들도 크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제도’가 올해에도 유엔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 ‘부패방지 척결’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습니. 청렴도 측정 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청렴도 측정 제도’의 수상으로 권익위는 2년 연속으로 유엔 공공행정상을 받게 됐어요. 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2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민원인, 내부 직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그간 공공행정 분야의 청렴도 평가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지로의 반부패 기술을 전파한 것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과거 3개 기관을 통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한국 고유의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의 통합과 연계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국민권익보호 정책과 업무가 새롭게 발전해 나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만.

“권익위는 분산돼 있던 3개 기관의 권익구제 기능을 합쳐 국민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형 권익보호 기관입니다. 그간 분산된 고충·부패·행정심판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기간 연기로 권익구제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게다가 권익위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으로 법령상 불합리한 요인을 원스톱으로 제거하고,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등 행정효율성도 향상시켰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통합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권익위가 한국형 국민권익 보호 모델로 자리매김해 새롭게 발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권익위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역시 커지고 있고요. 권

익위는 전자 공공토론을 쌍방향 토론장으로 정착시키고, 사회적 갈등 예방과 조정 역할을 통해 ‘국민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국민콜’이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합니다.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세 자리만 누르면 317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를 상담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110 국민콜은 상담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상담하며, 일반행정 민원 상담부터 세금·공공요금 상담, 일자리 안내, 사회복지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생계침해 신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상담대행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에 대한 상담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은 110 국민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자체상담으로 종결하고 연계상담이 필요한 전문 민원은 해당 기관 담당자와의 중계를 통해 처리하며, 기관에 연계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110 홈페이지(www.110.go.kr)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를 통해 예약상담도 받는다. 110 트위터(@110callcenter)와 페이스북(110call)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다. 특히 음성전화기를 이용할 수 없는 농아인들이 민원상담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한 화상수화·채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월 14일부터는 전국 공공행정기관에 110 화상수화통역 서비스를 시행한다.

권익위 조사관이나 ‘110 국민콜’ 상담원들도 수많은 민원을 상담하면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민원내용 없이 장시간 상담을 요청하거나 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무조건 조사관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가 힘들다고 해요. 최근 이러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많은 조사관, 상담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든 여건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위원회 조사관, 상담원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 신영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6개월

공익침해 신고 4만4508건 '소비자이익' 관련 88%로 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이익·공정경쟁·환경·건강·안전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패와 비리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 박경아 기자



'공익지킴이'들은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처리 경험을 공유해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5월 16일 부산·울산·경남지역 45개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들이 '공익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있다.

- # 한 건강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무면허로 '항아리 쭈뼛'을 시술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항아리 쭈뼛'을 과도하게 시술하는 등으로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의혹도 있다.
- # 한 무면허업자가 유험오리의 효능을 인터넷 등에 과장해서 광고한 후 암 환자에게 유험오리에 마늘, 죽염 등을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했다.
- # 피부관리실 여러 곳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레이저로 피부를 깎거나 눈썹 문신을 시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해 경찰청에 이첩한 사례들이다. 위의 두 건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자의 쭈뼛 행위 및 한약재즙 조제 행위로, 권익위는 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각각 위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공익침해 행위로 보고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해 경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레이저로 피부 박피나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한 의혹이 있는 피부관리실 10곳에 대해서도 무면허 시술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 받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문 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권익위는 '의료법'과 '보건법

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며,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

권익위 직접 신고는 건강 관련 으뜸

지난해 9월 3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 동안 권익위를 비롯한 전국의 172개 공공기관에 총 4만 4508건의 공익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소비자이익'과 관련한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가 3만8984건(87.6%)으로 가장 많았다.

공익침해 행위는 크게 ▲소비자이익 ▲환경 ▲건강 ▲공정경쟁 ▲안전 등 5대 분야로 나뉘 볼 수 있다. 소비자이익은 보험회사·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관련 민원, 방문 판매상품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환급 위반 등이 해당되며, 공정경쟁은 거래상 지위남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의 경우 폐기물 불법매립,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쓰레기 불법적치·소각 등이 포함되며, 건강은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축산물 등급허위판매 등을 꼽을 수 있다. 안전은 비상구 폐쇄·차단 등 유지관리 위반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권익위로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479건이며, 이 중 328건이 처리됐다. 위에 든 예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건강부문 허위·과장광고, 무자격 의약품 판매 등 건강 관련 공익신고가 전체 479건 중 232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처리된 328건 중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이 202건이며, 혐의가 없어서 종결된 사건이 126건이다. 이첩·송부된 사건 중에서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결과가 통보된 건수는 85건, 이 중 47건(55.3%)이 혐의가 인정돼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예를 들어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개설·운영,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등을 한 데 대해 약사법 위반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건강침해 사례로 과징금을 부과받도록 했다.

기관도 건강침해 신고 대상이 됐다. B형간염 핵산증폭 검사(NAT) 장비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55억84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장비도입을 지연한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장비도입지시 및 감사실시를 예고하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보일러등유를 디젤트럭 연료로 불법판매·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안전 및 공정경쟁 침해가 인정되어 4000여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서 많이 접수

권익위를 제외한 171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총 4만4029건의 공익침해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3만7733건이 처리됐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이익’(58.4%)과 ‘공정경쟁’(34.9%)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가 많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41.8%)과 ‘건강’(34.4%) 분야의 침해신고가 많았다. 공직유관단체인 금융감독원의 경우는 ‘소비자이익’과 관련된 공익침해 행위의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100%).

신고된 공익침해 행위 중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공익침해 개연성이 있어 관련기관에 송부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59.2% ▲중앙행정기관이 42.2% ▲공직유관단체가 8.1%였다.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에 공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신고가 많이 접수됐고, 공직유관단체는 단순종결 처리되는 신고가 많았다.

신고자 보호에 보다 경각심 필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면서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드러났다.

먼저 공익신고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이해가 미흡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일반민원이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공익신고’

라는 명칭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증거취부 등 신고요건 확인, 신분비밀공개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처리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다.

또 신고자 보호는 권익위만 한다고 판단해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자의 신분보호 의무를 크게 느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익위에 지난 6개월간 신분보호 불이식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등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와 구조 신청이 6건 접수됐다. 이 중 신분보장 2건과 신변보호 1건이 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됐다.

신분보장 사례를 보면, 부품파손 사고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로 각각 해임과 정직을 받은 공익침해 신고자들에 대해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또 그 간의 임금상당액(이자 포함) 일체를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됐다.

권익위는 제한구역에서의 입목벌채·위법건축물 시공을 신고한 후 협박 등 신변위협에 시달리던 공익침해 신고자에 대해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고자 주거지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민간기업 공익침해는 법 적용 허점

일부 민간기업의 부패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익침해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현재 180개에 이르지만, 비자금·분식회계 등 일부 민간기업 부패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보호할 수 없다.

권익위의 경우 공익침해 신고를 받고도 법적용을 할 수 없어 처리가 어

국민권익위원회 이외 기관의 분야별 공익신고 접수 현황

분야	합계	기관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건강	1,475건(3.3%)	180건(5.3%)	1,295건(34.4%)	-
안전	826건(1.9%)	13건(0.4%)	808건(21.4%)	5건
환경	1,616건(3.6%)	32건(1.0%)	1,576건(41.8%)	8건
소비자이익	38,903건(88.4%)	1,965건(58.4%)	58건(1.5%)	36,880건
공정경쟁	1,176건(2.7%)	1,176건(34.9%)	0건	3건
기타	33건(0.1%)	0건	32건(0.9%)	1건
합계	44,029건	3,366건	3,766건	36,897건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의 비중이 높아 유의미한 분야별 통계 도출에 한계



려운 사건이 전체 신고건수의 35%에 달했다.

권익위의 공익심사정책과 강화는 과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관한 상세 매뉴얼과 기업용 가이드를 제정해 각급 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를 의인화한 호루라기 모양의 스티커를 배포하는 한편 ‘권역별 공익지킴이’를 활성화하고, 연구용역과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익신고 및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공익지킴이’ 첫 발족

이러한 보완을 위해 가장 먼저 ‘공공기관 공익지킴이’가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환경 등 공익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45개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5월 16일 오후 2시 권익위가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공익지킴이’ 발대식을 시점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공익지킴이’들은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처리 경험을 공유해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권익위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공익신고 유형

유형	분야	건(비율)
무면허 의료행위	건강	98(20.5%)
허위·과장광고	의료부문/건강	61(12.8%)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건강	47(9.8%)
허위·과장광고	공산품 등/소비자	17(3.5%)
환경오염 관련	대기·수질·소음 등/환경	13(2.7%)
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경쟁	12(2.5%)
불법식품 판매 등	건강	11(2.3%)
기타		220(45.9%)

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비자금·분식회계 등 일부 기업부패를 포함하여 아직 보호되지 못하는 신고영역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앞으로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표준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추진

권익위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취업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시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공익신고를 할 경우 기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면제토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가 표준취업규칙을 개정하면 공익신고자는 사실상 모든 기업이 자사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기밀누설 금지 의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권익위는 우리나라의 1300여만 근로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860만의 종사자가 적용받게 될 표준취업규칙이 개정되면 기업 내부에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수준 높은 기업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8년 2월29일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으로 탄생된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 4년 반을 맞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조직적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로 다른 세 개의 기관이 물리적으로 통합된 '혼합위원회(hybrid commission)'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능적으로 위원회는 기존의 부패, 국민고충, 행정심판의 개별적 업무의 범주를 넘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4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부패방지와 관련

위, 권한, 자원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더 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더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수적이다.

첫째, 국가기관의 실제 권한 행사 정도는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정부 운영의 현실에서 볼 때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적 지위를 변경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법적 지위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역할과 나아갈 길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뤄 놓은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된 청렴도 조사는 이제 정착 단계를 넘어 올해 유엔의 공공서비스대상(Public Service Awards)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을 정도로 세계의 많은 국가가 주목하고 있는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반부패시책 평가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예방과 통제에 있어 위원회의 대응이 국민과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원회 내부의 한계라기보다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에 법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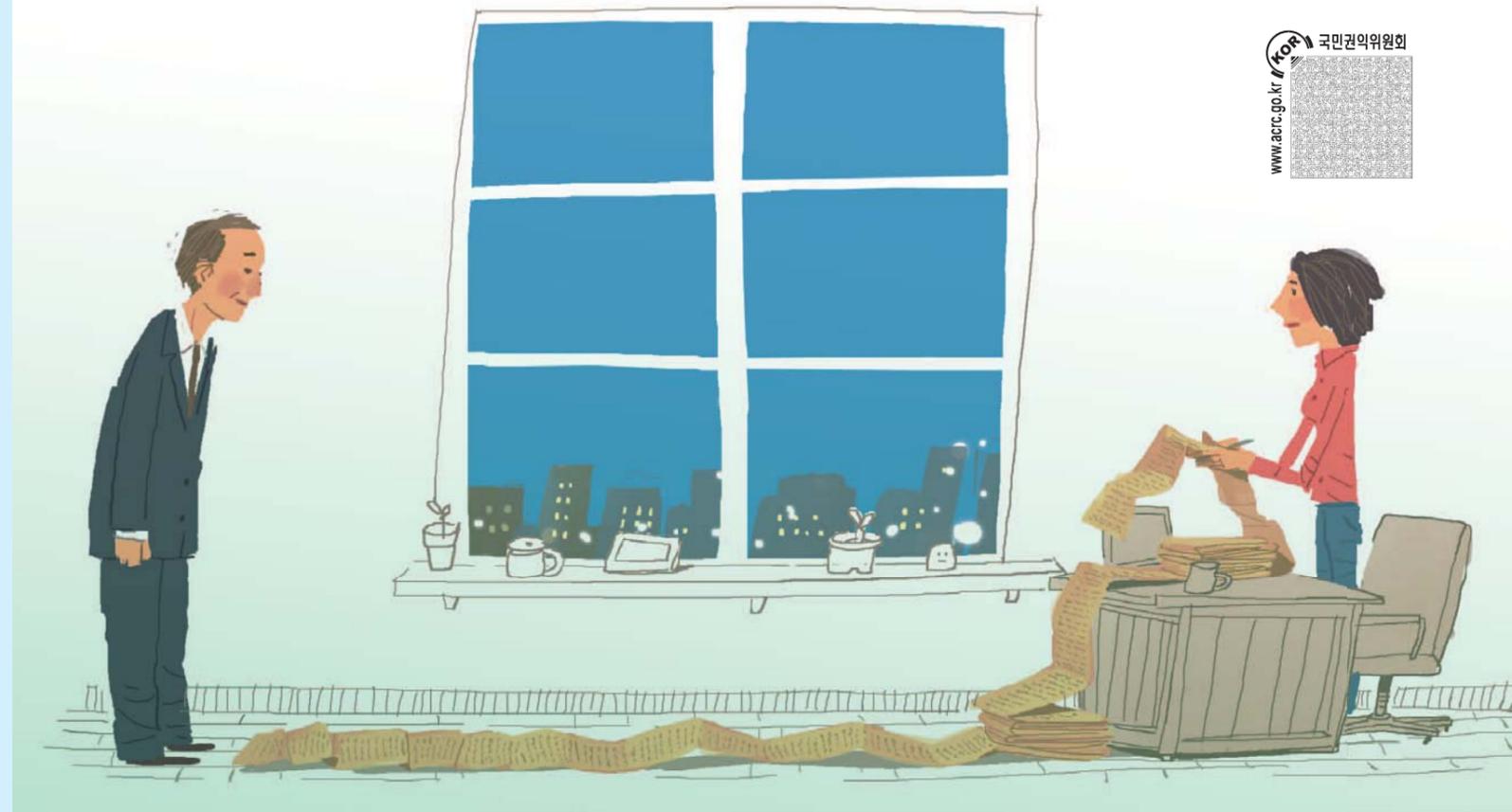
위, 권한, 자원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더 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더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수적이다.

첫째, 국가기관의 실제 권한 행사 정도는 기관의 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정부 운영의 현실에서 볼 때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적 지위를 변경한 것은 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법적 지위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한과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에 대한 강제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현행과 같이 위원회에 신고된 부패행위를 조사 기관에 이첩하거나 부패방지 시책과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으로는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국민 인지를 강화해야 하고, 더불어 정형화된 부패방지 업무를 넘어 변화하는 부패발생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과 국민권익 보호라는 어려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자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을 덧붙이는 바이다.



일러스트-이철원



공 / 감 / 누 / 리

110콜센터 개소 5주년 무슨 고민이든 연락주세요!
우리 이렇게 일해요 - 부패방지국 반부패 선봉대... 공정사회 앞당긴다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3년 연속 '청렴 1등급' 한국공항공사 김석균 팀장
글로벌 권익위 동남아 교민·기업들... "고충을 말해 봐!"
'청렴도 측정'제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 받았다

무슨 고민이든 연락주세요!



110콜 5년간 900만 건 돌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10콜센터가 개소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간 90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한
110콜센터는 국민이 정부 부처 그리고
공무원과 한 발짝 더 친근해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 글:하주희 기자/사진:이경민 기자

“대부업자에게 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계속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와요.”

2011년 9월 A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소유한 자가용을 담보로 맡겼다. 돈을 빌린 후 매달 대출이자 100만원을 총 4회 지급했다. 연이율 121.7%로 돈을 빌린 셈이다.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동안에도 대부업자는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대포차’로 썼다. 설상가상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계속 도착했다. 고민하던 A씨가 전화를 건 곳은 바로 ‘11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콜센터다. A씨의 전화를 받은 콜센터 상담사는 사정을 들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대포차량 운행 사실을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세금 관련 상담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까지 ‘OK’

110콜센터가 개소한 지 지난 5월 10일로 꼭 5년이 됐다. 그동안 A씨처럼 딱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 문의를 하기 위해 110콜센터로 걸려 온 상담 전화가 900만 통이 넘는다.

지난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에는 정부에 민원이 있는 국

민에게 행정조직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일반행정 민원상담과 ▲사회복지·보육비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을 비롯해 ▲주민세·수도요금 등 세금·공공요금 상담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등 생계침해신고 상담까지 폭넓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 속 ‘권익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의 문의 및 민원’을 110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110콜센터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217만30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년 대비 23%가 증가했다. 가장 잦은 상담은 전입신고나 공무원채용 등 행정·교육·문화와 관련한 상담으로 작년 기준 78만 건이다.

110콜센터는 일반상담뿐 아니라 정부 일부 부처의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및 국가보훈처, 식약청, 통계청 등 여러 공공기관의 콜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보훈처 상담 담당 부서는 한국능률협회에서 발표한 서비스품질지수 중앙정부 콜센터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기도 했다.

청각·언어장애인에 ‘화상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전문 상담부서를 제외한 부서 중 눈에 띄는 부서는 바로 화상수화채팅상담그룹이다.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을 전담하는 부서다. 6명의 상담사가 수화를 이용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민원 상담을 돕고 있다. 웹캠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상담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한다.

14일부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전국 공공행정기관 110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시작한다. 수화를 이용한 일종의 ‘민원 상담 보조 서비스’다. 청각·언어장애인이 전국의 공공기관을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수화를 모르는 공무원도 청각·언어장애인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110콜센터가 중간에서 일종의 ‘통역’을 한다.

이용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기관을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은 컴퓨터에 연결된 웹캠을 켜고 110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된다. 110콜센터가 연결되면 수화상담사는 청각·언어장애인의 민원 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말로 전해 주고, 다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수화로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콜센터를 통한 상담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상담사’다. 오래 근무한 상담사가 더 나은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 윤승욱 센터장은 “무엇보다 상담사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전화로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다 보니 상담사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한다. ‘외로우니 말상대 좀 해 달라’는 전화는 애교 수준이고, 상담사를 자신의 민원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상담사를 비하하며 반말을 하는 민원인, 전화를 든 순간부터 끊는 순간까지 성적인 욕설을 늘어놓는 민원인 등이 상담사들이 근무의 애로사항으로 꼽은 민원인이다. 110콜센터에는 5월 현재 134명의 상담사가 있다. 압도적인 대다수가 여성이다.

송현채(24) 상담사

“하루 평균 10건 이상 화상수화 하고 있어요”

송현채 상담사는 화상수화 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110콜센터 5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상담사 6명 중 한 명으로 뽑혀 상을 받기도 했다.

화상수화 상담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110콜센터에서 화상수화 상담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하루에 평균 10건 이상 상담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화상수화 상담뿐 아니라 일반상담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상담의 노하우가 있다면.

민원인들께서 얘기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지만, 묻고자 하는 요점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말을 들으면 ‘아 이걸 문의하려 하시는 거구나’ 느낌이 와요. 예를 들면 ‘우리 식구는 몇명이고 차는...’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면 ‘아 정부지원제도를 몰으시려는 거구나’하고,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찾아보는 식이에요.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가 있나요.

부부가 둘 다 청각장애인이신 분이 전화하셔서 아이의 언어발달이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위에 친척도 없어서 아이가 언어발달이 느리다고요. 구청에 전화해도 담당자가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정을 듣고 관련 지원제도가 있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언어발달교육지원 사업이란 게 있더라고요. 해결을 잘해 드릴 수 있어서 참 흐뭇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청각장애인이시라 보니, 그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110콜센터는 지난 5년간 90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 국민의 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콜센터에는 5월 현재 134명의 상담사가 활약하고 있다.

반부패 선봉대... 공정사회 앞당긴다

공공기관 청렴도·부패·공익신고 업무 등 맡아

우리나라의 대표적 반부패 기관은 공직자 부패를 사전 방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다.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은 바로 반부패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부서다.

청렴총괄과, 보호보상과 등 10개 부서에서 110여 명의 직원이 뛰고 있는 부패방지국을 살펴봤다. 글과 사진·남창희 기자

청렴총괄과

국민 가슴 멩들게 하는 부정 청탁 근절

“상무님, 부탁하신 사항을 처리하려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부하직원이 청탁등록 시스템에 청탁내용을

등록하게 돼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펴낸 청탁행위 대응매뉴얼 ‘알선·청탁이 괴로워에 실린 청탁거절 방법의 하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부패 사례가 바로 이 같은 청탁이다.



부패방지국은 대한민국 부패척결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부서다. 청렴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퍼질 수 있도록 보호보상과 직원들의 각오는 남다르다.

부패방지국 청렴총괄과에서 제작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전국 337개 기관에 배포한 이 매뉴얼에는 부당한 청탁과 정당한 부탁을 구분하는 방법에서부터 주체와 상황별로 청탁 내용과 대응 방법을 총망라했다. 그러나 매뉴얼은 강제성이 없다. 권익위는 더욱 획기적인 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청렴총괄과 박혁구 사무관은 “김영란 위원장이 권익위에 취임 하며 ‘법관 생활 30년 동안 부정청탁과 알선이 부패의 시발점을 알게 됐다’는 말을 했다”며 “권익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을 국회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청탁과 부탁을 구분한다. 고위공직자나 상급자, 가족·친구·선배 등 연고자가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가 청탁이라면, 부탁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호보상과

‘일상 속 작은 부패’ 신고 받아 포상금 지급

고공에서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씨는 행사를 운영하는 재단직원이 아르바이트생 채용인원과 근무시간을 조작해 인건비를 부풀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재단직원이 편취한 인건비 415만원이 환수됐고, A씨는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일상 속 작은 부패’를 신고 받고 이를 정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호보상과의 전담 업무다.

권익위는 최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국고환수가 없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패신고를 통해 잘못 지출된 예산이 환수됐을 때, 환수액의 20% 한도 내(평균 8~9%)에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환수 규모가 적거나 환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영관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는 공적 자금을 대해 ‘주인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학과라치, 파파라치는 주로 학원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부패신고 포

상금제는 공적자금이나 정부 지원금 등 공직자나 정부 재정의 잘못된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렴조사평가과 / 청렴교육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홍보와 교육 담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청렴조사평가과다.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는 올해 유엔(UN)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유엔경제사회와 발전관리국, 유엔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에서 세계 각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응모한 총 134개 가운데에서 정책과 제도를 심사한 결과였다.

한편, 청렴은 법 제정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빼놓을 수 없다. 청렴교육과에서는 부패방지국 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공직사회와 기업인, 일반국민 속에 잘 뿌리내리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 밖에 부패영향분석과는 시행을 앞둔 법령을 꼼꼼히 따져 보면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고, 개선안을 권고하는 작업을 한다. 행동강령과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부패방지와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는다.

국민신문고나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패신고는 부패심사과로 보내진다. 부패심사과에서는 개인성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직접 조사하고 종결짓거나 사안에 따라 검찰이나 감사원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

공익침해는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공익심사정책과에서는 공익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

지금까지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한해서만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민간부문의 신고자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공익심사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

3년 연속 '청렴 1등급' 한국항공공사 김석균 팀장 “클린코치·청렴지기 등 자율참여 많아요”

한국항공공사가 3년 연속으로 국내 공공기관 중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부패방지 의지와 노력도를 평가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201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한국항공공사가 208개 기관 중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은 것이다. 글·권세진 기자

한국항공공사는 2009년부터 3년 연속 1등급을 받아 최상위의 청렴 공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권익위는 “한국항공공사가 반부패 청렴 시스템이 매우 견고하고, 자율적인 청렴실천 조직이 구성돼 있는 한편 임직원들이 ‘클린 에어포트’ 캠페인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2011년 평가대상 공기업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4곳(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항공공사, 한국도로공사)뿐이다. 어떻게 한국항공공사는 3년 연속으로 최고 청렴 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김포공항에 위치한 한국항공공사 사무실에서 청렴TF팀 김석균 팀장을 만났다. 김 팀장은 “1700여 명의 공사 직원 모두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3년 연속으로 청렴 1등급을 받았는데, 비결이 있습니까.

“사실 2008년까지는 우리 공사가 권익위 평가에서 청렴도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2009년부터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각종 청렴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공사 직원 수가 적지 않은 만큼 청렴수준을 관리하고 평가할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느꼈죠. 청렴TF팀이 감사실 내에 감사실장 직속의 태스크포스(TF)팀으로 구성된 것은 2011년인데 올해 초 인사에서 공사내 공식 팀으로 직제화됐습니다. 청렴TF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항공사의 청렴 시스템을 소개해 주십시오.

“크게 정책수립·실천·점검·평가의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를 위해 청렴 관련 최상위 조직인 반부패청렴추진단이 구성됐고 상임감사가 반부패청렴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본사 실장 15명과 위촉된 민간자문위원들이 청렴정책을 수립하고요. 그 아래 실무조직에는 반부패청렴실천단이 구성돼 있는데, 82개 팀에 팀별로 클린 코치(clean coach)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단위별로는 ‘청렴지기’가 있고요. 청렴교육을 담당하는 ‘청렴학습관’도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300여 명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청렴실천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점검과 평가도 철저하다고 들었습니다.

“반부패청렴실천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별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취합해 감사실과 청렴TF팀이 개발한 청렴문화지수를 토대로 분기별로 청렴수준을 측정하고, 청렴신호등으로 표시해 통보합니다. 연말에는 이를 평가해 성적을 내서 내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요.”

‘클린 에어포트(Clean Airport)’ 캠페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청렴한 공항문화를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공항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공항공사 직원들은 극히 적습니다.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죠. 입주해 있는 국가기관과 민간업체 등이 많고 이 밖에도 공항운영을 도와주는 협력업체 직원이 공사 직원의 2배가 넘습니다. 이들을 모두 아울러서 청렴행사와 청렴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관련된 각종 부조리를 없애자는 것이 클린 에어포트 캠페인입니다.”



5월 8일 청렴의 날 행사에서 열린 청렴골든벨 이벤트에 한국항공공사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했다.

청렴의 날 행사를 매년 한다고 들었습니다.

“2009년 ‘청렴문화행사의날’을 제정해 매년 행사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6월 중순에 했는데, 1년간 청렴문화 확산과 홍보를 하기에 좀 늦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앞당겨서 5월 8일에 김포공항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청렴문화행사의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참가를 대폭 늘려 청렴문화콘텐츠 공모, 청렴골든벨 행사에 절반을 넘을 정도로 외부인이 많이 참석했어요.”

이 밖에 청렴 가족사진 공모전, 실천사례 슬로건 공모전 등을 열었고 직원들의 서약결의 행사도 있었습니다. ‘재직기간 중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직할 것이라는 내용에 서약하는 행사였죠.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실천 의지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봅니다.”

권익위 평가에서 청렴동아리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사내 청렴동아리가 지역별로 총 20여 개에 달하는데, 올해부터는 동아리연합회를 만들어 감사실에서 동아리대표 모임을 지원하고 더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 등 전사적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김포공항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항공공사 청렴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열렸다. 성시철 한국항공공사 사장이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동남아 교민·기업들... “고충을 말해 봐!”

이동신문고, 5월 14~18일 베트남·태국·필리핀에서 운영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동남아로 진출했다. 권익위는 5월 14~18일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서 각각 이동신문고를 열고 현지 거주 재외국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해외 이동신문고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과 기업들의 고충민원을 해당 기관의 협력하에 현지에서 접수해 처리하는 권익위의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해외 이동신문고가 열린 바 있다. 글: 권세진 기자

동남아 이동신문고는 5월 14일 베트남 하노이 한국대사관, 16일 태국 방콕 한국대사관, 18일 필리핀 마닐라 한국문화원에서 각각 열렸다. 베트남에는 8만여 명, 태국에는 1만7000여 명, 필리핀에는 9만 6000여 명의 교민이 살고 있다.

이번 해외 이동신문고는 박재영 부위원장이 조사관들을 인솔해 진행했으며 국가별로 민원상담장을 설치해 교민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태국에서는 현지 옴부즈만이 직접 권익위 상담장에 나와 현장에서 답변이 가능한 교민들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도 했다.

교민들, 비자 문제·한인학교 지원 등 건의

16일 방콕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태국 이동신문고에는 30여 명의 교민이 참석해 교민의 취업비자 불편사항과 한국기업 근로자의 단기비자제도 마련 등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과 태국 옴부즈만 시라차 샤로엔파니(Prof. Siracha Charoenpanij), 태국 옴부즈만 사무차장 락사게차 차에차이(Raksagecha Chaechai), 신진선 총영사가 참석했다.

우리 교민들은 태국 출입국 당국에 교민들의 취업비자에 대해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거주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불편 개선과 현지 진출 기업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방문하는 기술자에 대한 단기비자(3개월 정도)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교민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 재외국민 자녀들에 대해서도 현행 의무교육

제도에 준하는 지원 요청, 한인학교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등을 건의했다. 태국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 답변하기로 했다.

한편 박재영 부위원장은 현지 교민들의 민원 상담 외에 베트남 감찰원(14일), 태국 옴부즈만(16일), 필리핀 옴부즈만(18일)을 각각 방문해 이동신문고 운영 정례화와 전용 민원창구 개설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 부위원장은 15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감찰원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했다. 포스코E&C가 건설중인 북(北)안카잉 신도시 개발 현장을 둘러본 박 부위원장은 우리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태국과 옴부즈만 운영 5개 사항 추진 합의

16일 박 부위원장은 방콕 소재 태국 옴부즈만 사무소를 방문해 2011년 12월 체결한 양국 옴부즈만 간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태국 수석옴부즈만 파닛 니티탄프라파(Mrs. Panit Nitithanprapas), 옴부즈만 시라차 샤로엔파니, 옴부즈만 프라비시 라타나피안(Dr. Pravich Rattanapian)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옴부즈만은 재외국민을 위한 상호방문 해외 이동신문고 정례운영, 상대국 재외국민을 위한 민원접수 전용창구 개설, 한·태국 옴부즈만 공동 국제워크숍 추진, 상대국 민원 관련 연락책임관 지정, 상대국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접수 전용창구 홍보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태국에 있는 약 2만명의 우리 국민은 태국 정부에 대한 민원을 태국 옴부즈만을 통해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태국 거주 국민들이 국민신문고(e-People)를 통해 태국정부에 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이를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옴부즈만에게 전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재외국민들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박재영 부위원장은 “앞으로 현지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부위원장이 5월 16일 방콕소재 한국대사관에서 이동신문고를 개최해 교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5월 14일 베트남에서 이동신문고를 개최해 상담을 하고 있는 박재영 부위원장.



박재영 부위원장이 5월 18일 필리핀 옴부즈만 사무소를 방문, 올란드 카시미로 수석 옴부즈만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포스코E&C가 건설중인 베트남 신도시 현장에서 박재영 부위원장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듣고 있다.

‘청렴도 측정’제도 유엔공공행정상 대상 받았다

‘공공행정의 부패 방지 및 척결’ 분야... 전세계서 1344개 정책·제도 응모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해 민원인과 공직자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부패 관련 설문을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제도가 2012년 유엔(UN)공공행정상(PSA : Public Service Award)의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유엔공공행정상은 유엔이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6월 세계의 우수 공공정책과 제도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총 1344개 정책 및 제도를 응모하였으며, 유엔경제사회(UNDESA) 산하 공공행정 및 발전관리국(DPADM)과 유엔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UNCEPA)의 세 차례에 걸친 심사 및 검증을 통해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청렴도 측정 제도의 대상 수상으로 국민권익위는 작년 국민신문고의 우수상 수상(정부지식관리 향상 부문)에 이어 2년 연속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하게 됐다.

6월 25~28일 뉴욕 ‘유엔공공행정의 날’ 행사서 시상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제도는 민원인과 공직자 약 22만명(2011년 기준)을 대상으로 부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패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제도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기관별 청렴도 점수와 등급의 산출근거로 활용되고, 이렇게 산출된 점수와 등급은 매년 12월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2002년 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2011년 684개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측정대상의 규모와 측정결과 활용 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제도를 통해 드러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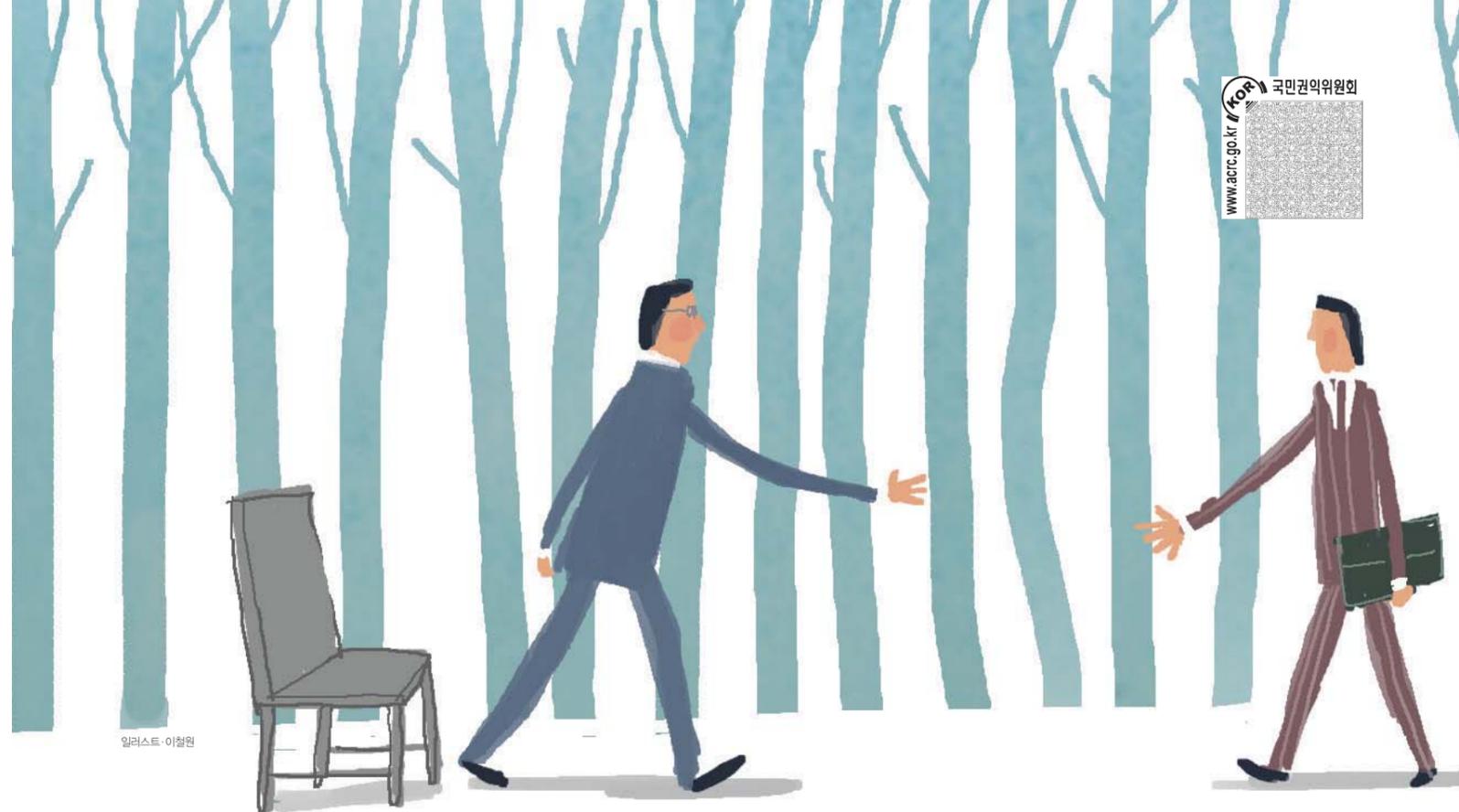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 시상식은 6월 25일 뉴욕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탄자니아에서 2011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하고 있는 박계옥 부패방지국장.

각 기관에 대한 측정결과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됨으로써 인사·예산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측정결과에 대한 사회 전반의 폭넓은 관심으로 인하여 각급 기관들 간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어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높은 부패현황 자료를 산출하는 ‘청렴도 측정’의 제도적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 공직자의 이익충돌 상황 등 국민들이 인식하는 새로운 부패유형도 측정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6월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유엔공공행정의 날(UN Public Service Day) 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며, 시상식 후에는 각국 정부대표, 학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포럼에서 청렴도 측정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일러스트 이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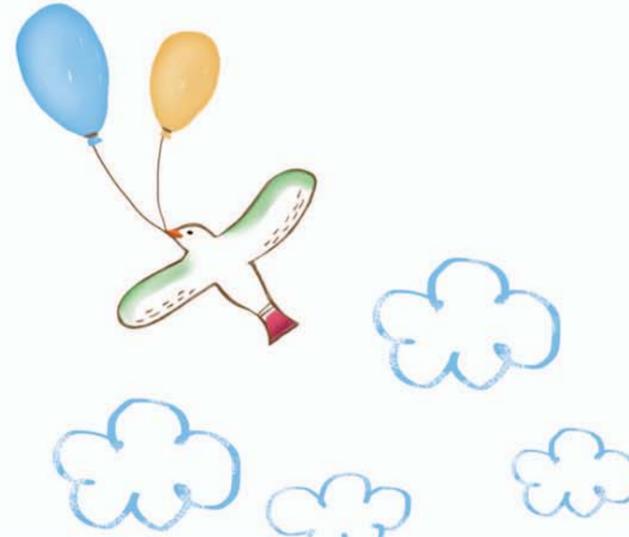
소 / 통 / 누 / 리

권익위가 갑니다 경남 양산 이동신문고·민원청취 현장
조정회의 현장 설득과 타협... 농민들 피해보상 길 열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심판·고충민원처리 통해 국민불편·민원 4건 해소
위원장의 편지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명창이 됩시다”

머리를 맞대니 주민고충 “해결!”

경남 양산 이동신문고·민원청취 현장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에서 국민의 민원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출동하는 ‘이동신문고’가 지난 4월 25~27일 부산과 경상남도 양산·창녕에서 열렸다. 이동신문고는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지역방문 민원상담·처리 시스템이다. 글·권세진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김영란 위원장(맨 오른쪽)이 지난 4월 26일 양산시청 회의실에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부터 양산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에는 아침부터 수십 명의 민원인이 모여들어 지역주민들의 이동신문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이동신문고는 법률상담, 운영지원, 복지노동, 재정세무 등 9개 분야에 걸친 전문 상담가들이 참석해 고충민원 상담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직접 상담관 자리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 민원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등 민원 제기

양산시 남부동 소재 양산물금7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7단지 한 주민은 “아파트와 고속도로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다”며 “반드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와 LH공사는 예산문제와 소음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굳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방음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직접 LH와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후 “주민들이 오랜 기간 차량소음에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고, 양측은 합의와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수영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양산시 동·면 5개 마을 발전협의회 김일두 회장은 “동·면 5개 마을의 숙원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영강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한다”며 부산시와의 중재를 요청했다.

현재 수영강은 상류와 하류로 나뉘어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보호구역인 상류를 사람들이 직접 관리할 수 없다 보니 상류의 문제로 인한 하류 오염과 하류의 수량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 중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 처리하고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날 각종 민원에 대한 적극적 중재 이후 시청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시민의 민원을 듣고 있다.

회의실에서 열린 양산시민과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역 현안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지자체 관계자와 교육·농업·상업 종사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다.

간담회 참석자 중 양산 다문화지원센터의 이부화씨는 “양산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돼 있어 조속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에 김 위원장은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주여성들을 위한 10개 국어 지원을 통한 민원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며 이주여성들의 활발한 이용을 부탁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들은 주민들에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와 국민신문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도사 하이패스 나들목 추가 이견 조정

양산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이어 김 위원장은 통도사 하이패스 나들목 추가 설치와 관련된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지난해 12월 설치된 통도사 하이패스 나들목은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휴게소 뒤편에 설치된 국내 최초의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으로, 하이패스 사용을 권장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정체현상을 상당부분 해결하는 효과가 있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이패스 나들목이 현재 통도사가 위치한 하북면에서 부산 진출 방향에만 설치돼 있고 부산에서 하북면으로 진입하는 나들목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 주민 및 관광객들이 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 70만명에 이르는 통도사 관광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통도사 휴게소에서 도로공사 관계자와 하북면 주민 대표, 통도사 주지스님 등을 만나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에서 하북면으로 진입하는 나들목 설치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측과 주민 측의 방향이 달라 팽팽한 의견 대립과 주민 측의 격앙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반대편 나들목을 새로 설치하거나 공사하는 데 예산이나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면 도로를 약간만 손보거나 방향을 트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로공사 측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도로공사 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도로공사 기준에 따라 통행량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굳이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양측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통행량 조사와 주민 여론 경청 등을 통해 새 나들목 설치에 대해 성실히 논의할 것을 양측에 요청했고, 민원 신청인과 도로공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



김영란 위원장이 양산시 관계자로부터 지역현안 설명을 듣고 있다.



통도사 휴게소에서 현장조정에 나선 김영란 위원장.

를 마련해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국가예산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점을 찾아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지방과 해외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매월 2박3일 일정으로 지방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46개 시·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김영란 위원장은 “전국에서 이용가능한 110콜센터와 국민신문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총 123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중 244건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했다. 또 권익위는 각 지역을 방문할 때 이동신문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의 소통간담회를 주최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동신문고와 소통간담회는 국민권의 위원회 현장운영의 주요한 축이 되고 있다. 이동신문고는 5월 동남아(베트남·태국·필리핀)와 중국에서 열리는 등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예정이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5월 15일 농경지 침수로 수박농사를 망쳤다는 경북 고령군 농가를 찾았다.



김영란 위원장이 피해 농민의 하소연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 중재로 5개월의 진통 끝에 원인규명 공동조사에 합의했다.

설득과 타협... 농민들 피해보상 길 열었다

경북 고령 농경지 침수 원인규명 위한 공동조사 5개월 만에 합의

이해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힘들 때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행정절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이다. 이 자리에서 도출된 조정안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국도 67호선이 지나는 경북 고령의 우곡면 연리. 그 연리 들녘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방문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 글·김태완 기자

지난 5월 15일 국도 67호선이 지나는 경북 고령의 우곡면 연리. 인근 회천(會川, 혹은 모듬내) 변 늪에 연꽃이 만발해 연리(蓮里)라 불려 온 이 마을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올 수박농사를 망쳤기 때문이다. '연리 들녘' 주민들은 평생을 수박밭에서 한철을 보내 왔다. 그들에게 수박농사는 자식농사와 다름없다. 그런 '자식'이 시름 시름 앓고 있으니 농민들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 연리 들녘에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찾아간 것이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농경지 침수피해 보상대책'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피약별이 쏟아지는 들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영란 위원장, 현장에서 농민 목소리 경청

섭씨 40도가 넘는 비닐하우스에는 수박넙쿨이 파리를 들고 있었다. 그곳에서 김 위원장은 거친 농민과 농심(農心)을 마주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혹시나 김 위원장이 진흙에 빠지지 않을까 목이 긴 장화까지 마련해 뒀다고 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구둑발로 흙먼지가 이는 발고랑을 누볐다.

"더 많이 보여주세요. 다른 현장도 보았으면 합니다."

김 위원장은 농민들이 왜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는

지, 피해 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대법관 출신답게 여러 차례 농민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농민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30년 동안 재판을 통해 민원인의 얽힌 감정을 풀어 내는 일을 많이 해 왔다"며 농민과 눈을 맞추며 그들의 외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농민 피해를 직접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요. 원인규명이 안되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규명이 이뤄지면 복잡한 문제도 술술 풀릴 것이라 믿어요."

연리 들녘 주민 김진희씨는 "낙동강 창녕합천보 건설로 연리의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농지의 습지화'가 이뤄져 수박이 시들었다"고 주장했다.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수박 시들 증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비닐하우스 540개 동 중 321개 동에서 시들 증상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수박넙쿨에 잔뿌리가 사라지고, 기형이 생기는 등 생육 발달이 부진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했다. 고령군이 군비 2700만원을 긴급 확보해 비료와 영양제를 뿌렸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농민 박영호씨 등은 "예년엔 비닐하우스 한 개 동당 480만원씩 계산해 27억4000만원의 농가소득을 보았다"면서 "올해는 연리들 지

하수위 상승으로 수박의 상품가치가 떨어져 농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리들 농민들에 따르면, 작년 말 연리에서 직선거리로 3km 가량 떨어진 창녕합천보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농지 습지화’ 현상이 생겨났다고 했다. 작년 11월 하순과 12월 초순의 경우 창녕합천보가 가둔 물의 수위가 10여m 되자, 연리들 아래 지하수의 수위가 지표에 서 약 1.8m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었다.

“낙동강 창녕합천보 건설로 지하수위 상승”

농민 김진희씨는 “지난해 논바닥을 포클레인으로 파내자 짧은 시간에 큰 물웅덩이가 생길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물의 성분분석을 경북도 농업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철과 망간, 칼륨, 마그네슘 등 광물 성분이 나왔다”고 했다. 다시 말해, 보 안의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결국 수박밭으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녕합천보 건설을 시행한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농민들의 피해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연리들 일대에 예년의 3배 이상의 비가 쏟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수자원공사 측 입장이었다. 낙동강 보 건설이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수자원공사 김영도 경남지역본부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연리들 일대의 지하수위 상승을 분석하기 위해선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용수 경북지역본부장도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며 “농민과 정부가 다투지 않는 선에서 수박이 시드는 원인이 밝혀지고, 대책까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란 위원장은 수박밭을 둘러본 뒤 인근 우곡면사무소로 향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면사무소 강당에는 김 위원장이 온다는 소식에 많은 농민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다. 몇몇 농민의 손에는 ‘연리들 대책위원회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가 쥐어져 있었다.

얼핏 보니, ‘연리들 농민 전체는 4대강 개발 전과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합천보 수위를 4m 이하로 낮추거나, 연리들 리모델



김영란 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부산 수민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서경리 기자

링 사업 등 근본 대책을 수립,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건의드린다”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연리지역 주민 140여 명이 국민권익위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12월 초, 주민들과 수공, 농어촌공사 간 책임공방을 벌였으나 원인규명이 쉽지 않았다. 권익위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

가까스로 지난 1월 29일 주민과 정부기관끼리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나, 이번에는 공동조사의 용역기관 선정, 용역비 부담 여하에 대한 이견이 생겼다. 다행히 지난 3월 수공 측에서 공동조사 용역비를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 최학균 대변인은 “공동조사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며 “공공(公共)갈등 해소를 통해 민원 신청인과 관계기관 모두가 ‘윈-윈’ 하는 대안적 중재방안을 마련하려 애썼다”고 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과의 협상과정에서 연리까지 내려가 2차례 현장조사를 벌였고, 지난 1월 5일부터 5월 2일까지 주민·정부기관

과 모두 6차례 중재협의를 벌였다. 심지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수박 작물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회의를 가진 일도 있다. 전문가들은 “침수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지하수위, 기온, 강수량 등 장기적인 모니터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공동조사 실무협의회 30일 내 구성기로

결국, 권익위의 중재로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5개월간의 지난(至難)한 중재가 드디어 빛을 본 것이었다. 중재를 이끈 조정안의 골자는 ‘주민과 수공, 농어촌공사 등은 침수피해 조사를 위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30일 내 구성하고, 구성일로부터 90일 내에 조사용역에 착수기로 하자는 것.

권익위 정혜영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 “실무협의회에서 발주한 공동조사 전문가 구성은 토목·지하수·토양·농업 등의 관련 학회에 의뢰하고, 전문가 선정은 해당 학회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무협의회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에 따라 피해규모, 발생원인별 책임비율을 산정하되 보상 여부는 조사 후 관련 법령, 판례 등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안락아파트 지구내 ‘홍물’... 30년 방치 학교용지 해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부산 동래구 낙민동을 찾았다. 낙민동 안락아파트 지구내 학교 용지가 30년간 방치돼 있어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민원이 제기된 용지는 안락아파트 지구 내에 위치한 2만5000㎡(약7500여평) 규모의 땅이다. 인근 안락아파트 지구는 1978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1997년 6개 단지 3371세대가 입주해 대규모 주택가를 이루고 있다. 학교용지는 부산시 도시계획에 따라 1982년 낙민중학교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며 학교가 설립되지 못한 채 30년간 방치돼 왔다. 따라서 학교용지의 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주거환경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됐고, 토지주와 아파트 주민 400여 명이 함께 학교용지 해제를 위해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26일 오후 3시 동래구 수민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는 김영란 위원장 외에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주민들은 해당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면서 우범지역으로 변질되고 있고, 부지 중 일부에는 철공소나 공장 등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로 생활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학교용지가 30년 동안 방치되면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홍물스럽게 변했고, 무허가 포장마차와 카센터 등이 들어서 주거환경이 나빠진 것은 물론 비행청소년의 집합장소로 이용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도 2005년부터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학교시설 폐지를 요청했으나, 부산광역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국토계획법 등 여러 관련법령 검토가 필요하지만 동래구와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와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토대로 26일 현장조정회의에서 토지소유자와 아파트 주민대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부산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중재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학교용지를 포함한 안락아파트지구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고 ▲동래구청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미개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을 직접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장기간 묶여 있던 사유재산권 제한을 풀고, 낙민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기자

단순과실 범죄 있어도 “국립묘지 안장 허용”

행정심판·고충민원처리 통해 국민불편·민원 4건 해소

행정기관의 착오로 국민이 장기간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데 대해

변상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또 ‘여권의 영문 성명은 변경할 수 없다’며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글·권세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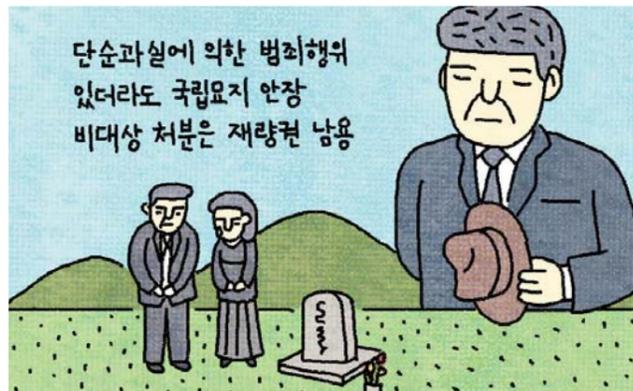
국가유공자의 ‘영예성 훼손’ 처분은 위법·부당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범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단순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6·25 전쟁 참전으로 둔부과편장을 입고 1990년에 사망한 국가유공자 이모씨는 1976년 90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사람을 태우고 시골 농로를 가다 노인을 발견하고 피하려다 넘어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했던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다.

동승자는 상처부위에 파상풍균이 침입해 사망했고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비(非)대상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예성 훼손여부에 대한 정상참



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고는 고인의 단순과실로 보이는 점, 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유족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 전에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해 ‘이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는 재량권 남용

‘여권의 영문 성명은 변경할 수 없다’며 외교부에서 여권발급을 거부당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

근 신규 여권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청구인 오모씨에게 여권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구인은 지난해 말 신규여권 발급신청을 하면서 직전에 사용했던 영문성명 중 ‘JAI(재)’를 ‘JAE’로 바꿔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중앙행정심위는 청구인이 구 여권의 영문성명을 변경 신청한 데 부정할 목적이 없으며, 신용카드와 명함, 학위증서, 어학증명서 등의 영문성명이 모두 ‘JAE’로 표기돼 있는 데다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상 ‘재’는 ‘JAE’로 표기되는 만큼 여권발급 부처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행정기관의 착오 인정... 변상금 환급 권고

행정기관의 착오로 국민이 장기간 공유지(公有地)를 무단으로 점유한 데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민원인 한모씨는 1985년 서울 종로구 신영동 소재 공유지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고, 종로구청이 분할해 주는 대로 토지의 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200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종로구청에서 측량을 실시, 한씨가 약 5.3m의 공유지(도로)를 점유했다며 5년치 변상금 약 89만원과 해당 주택을 철거하기 전까지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변상금은 사용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 또는 점용료에 20%를 가산해 징수한다.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종로구청이 당



초 한 필지였던 공유지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8필지로 분할 측량해 매각했고, 분할된 토지의 무허가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종로구청장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변상금은 환급하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명의 도용당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취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성북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민원인 김모씨는 2005년 7월경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에게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고 5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2006년 3월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흥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21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했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당했다.

김씨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사업자등록증 대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내역 등 확인작업을 통해 사채업자가 김씨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영업에 이용한 것을 밝혀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귀명창이 됩시다”

지난 금요일(4.13) 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반부패·청렴 전문강사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반부패·청렴’에 대해 강의하시는 분들이 모여 강의비법·최신정보 등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아트스피치’로 유명하신 김미경님의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도 강의 못하기로 소문난 사람인지라 어떻게 하면 스피치가 Art가 될 수 있는지
 자못 궁금하여 열심히 강의를 들었습니다. 스피치는 글이 아니라 말이다, 방금 위원장이 한 ‘인사말씀’은
 말이 아니라 글이었다 등으로 시작된 강의는 과연 명불허전이란 말 그대로 Art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귀명창’과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귀명창이란 판소리를 즐겨 듣는 사람들을 단순한 애호가 수준을 넘어 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소리를 제대로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귀명창은 또 추임새를 잘 넣어서
 공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명창은 귀명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좋은 공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귀명창이 좋은 소리를 낚는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공민장에서처럼 늘 명창은 명창이고 귀명창은 귀명창이지만은 아닐 것입니다.
 공민장에서는 명창이신 분도 일상에서는 귀명창의 역할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귀명창의 역할을 해야 할 때인데도 명창의 역할을 고집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공직자와 국민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공직자가 명창의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또 때로는 귀명창이 되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가
 바로 귀명창의 임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영란



일러스트 이철원



행 / 복 / 누 / 리

- 여행 전남 여수
- 시네마토크 <천국의 아이들>
- 건강 다이어리 '가족력'을 보면 가족 건강이 보인다
- 역사속 권의 권력을 친 관료로 축재의 유혹 마다한 '청백리'는 선비의 표상
- 스포츠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올해 꿈은 런던의 '여왕'
- 컬처 & 컬처 전자책은 패스트푸드... 독서식탁 메뉴 넓혔다
- 알아두세요 '사회의 독버섯'... 불법사금융 척결 나섰다
- 이 한권의 책 <러쉬>
- 뉴스 & 피플
- 독자와의 대화



밤이면 들산대교에 조명이 들어와 여주시내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전남 여수 맛과 멋의 고향 엑스포로 새 단장

여수에 봄이 한창이다. 봄빛이 쏟아지는 바다도 한결 푸르러졌다.
여수엑스포도 개막했다. 여행하기 좋은 봄,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은 여수로 떠나 보자. 글과 사진·최갑수 (여행작가)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핫 플레이스'는 단연 여수다. 5월 12일 개막한 여수 세계박람회 때 문이다. 미국 CNN은 여수를 '2012년 꼭 가 봐야 할 최고의 여행지 7곳' 가운데 1위로, '론리 플래닛'은 '2012년 꼭 해야 할 10가지' 가운데 하나로 여수 여행을 선정했다.

멋의 여수 오동도 · 향일암 · 진남관은 꼭 들르는 명소

여수에 도착한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오동도다. 3만8000여 평의 조그마한 섬이지만 그 속은 별천지다. 동백나무 4000 그루와 200여 종의 상록수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하다.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가 약 2km 정도 이어지는데 한려수도의 빼어난 바다풍광과 어우러져 근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향일암은 일출을 보기 위해 여행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 곳이다. 남해 금산 보리

암, 강화도 보문사 등과 함께 국내 3대 기도처로 꼽힌다. 659년 선덕여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향일암 오르는 길은 돌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데, 계단이 끝날 무렵 큰 바위 사이로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비좁은 터널이 나오고 이곳을 지나면 향일암이다.

여수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통일신라시대 순천부내 해읍현과 여산현 등으로 불리던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던 여수는 조선 선조 24년 전라도 수군절도사, 선조 26년 3도(충청·전라·경상) 수군통제영을 두면서 군사 요충지가 됐다.

여수 시내에 있는 진남관은 75칸의 대규모 객사. 남쪽의 왜구를 진압해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진남관(鎭南館)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1599년 충무공 이순신 후임 통제사 겸 전라좌수사 이시언이 진해루 터에 다시 세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층 목조건물이기

도 하다.

돌산읍 굴전마을에 있는 무술목은 '무술년 전적지', '무서운 목'이라는 뜻을 가진 해변이다. 1588년(무술년) 이순신 장군이 까막만에 침범해 온 왜선 60척을 수장시킨 데서 이름 붙었다. 여수 사람들은 '파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왜군이 많이 죽어 바다가 핏빛으로 물들었다는 뜻이다.

무술목 · 천사골목 · 교동시장은 숨은 명소

이름과는 달리 무술목은 참 예쁜 해변이다. 사금처럼 고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고 뒤편에는 무성한 송림이 자리하고 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한없이 잔잔하다. 그리고 모래밭과 송림 사이에 몽돌밭이 있다. 밀물이 지면 몽돌밭까지 파도가 밀려온다. 잘박잘박, 파도가 몽돌을 어루만지는 소리가 꿈결 같다.

여수시 남쪽에 있는 돌산도는 국내에서

7번째로 큰 섬이다. 과거에는 배로 이동했다. 그러나 1984년 여수시 남산동과 돌산읍 우두리를 연결하는 돌산대교가 놓이면서 섬은 육지가 됐다. 다리를 건너 돌산도에 들어서면 왼쪽 언덕에 돌산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돌산대교뿐 아니라 여수 시내, 여수항 그리고 주변의 섬들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낮에 보는 돌산대교는 그다지 아름답다고 할 만큼은 아니지만 해가 지고 불이 들어오면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바다 위에 20m 높이로 떠 있는 다리는 노란색이었다가 붉은색, 다시 초록색으로 바뀐다. 자봉도, 화태도, 월호도, 금오도를 오가는 배들이 불빛을 기다랗게 흘리며 돌산대교 아래를 지나 여수항으로 들어간다. 이즈음이면 여수의 연인들도 자동차를 몰고 슬슬 돌산공원으로 오기 시작한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데이트를 즐기는 그들의 모습이 마냥 평화로워 보인다.

여수에는 길이 1004m짜리 골목이 있다.

그래서 일명 '천사골목'으로 불린다. 골목 벽에는 화사한 벽화가 가득하다. 여수의 역사와 문화, 전설 등이 그려진 벽화도 있고 허영만, 백일섭 등 여수 출신의 유명인을 재미있게 표현한 벽화도 있다. 한나절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보기 좋다.

시장 구경도 빼놓을 수 없다. 여수항 한편에 자리한 교동시장은 여수 최대의 시장이다. 1965년 문을 열었다. 돌산 갓길치는 물론이고 각종 건어물, 여수의 명물 서대까지 수산물과 특산품이 즐비하다. 매일 새벽에 열여오 후 1시면 문을 닫는다. 해가 지면 포장마차촌으로 변신한다

여수항에서 114.7km 떨어진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다도해 최남단의 섬이다. 거문도 트레킹 코스는 덕촌마을의 들머리에서 시작해 불탄봉을 거쳐 양편의 깎아지른 듯한 능선을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유인 등대인 거문도 등대까지 이어지는데 걸어서 3~4시간 가량 걸린다. 코스가 어렵지 않아 초등학교도 무난하게 즐길 수 있다. 양편에 바다를 두고 걷는 기분은 국내의 유명 트레킹 코스에 뒤지지 않는다.

맛의 여수

입맛 당기는

장어구이 · 장어탕 · 금풍생이

여수는 맛으로 이름난 고장이기도 하다. 장어구이를 비롯해 서대회, 돌게장, 금풍생이 구이 등 맛있는 해산물들을 맛볼 수 있어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수를 대표하는 맛은 장어다. 오동통한 바닷장어를 숯불에 노릇하게 구워 먹는



먹음직스러운 간장게장 정식.



여수의 별미 서대회무침.

다. 두툽한 살집이 도시에서 먹는 장어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소금구이로도 먹고 양념으로도 먹는데 현지인들은 소금구이를 더 즐긴다. 양도 푸짐해서 셋이서 2인분을 시켜도 충분하다.

여수 사람들은 장어탕도 즐겨 먹는다. 장어를 몽둥몽둥 썰어 넣고 시래기 등과 함께 푹 끓이는데 두툽한 장어 살집이 푸짐하게 들어있어 씹는 맛도 제법 난다. 국물 맛이 일큰하면서도 시원한 데다 개흙 냄새나 비린내가 없어 해장국으로도 그만이다.

금풍생이(군평서니)는 여수를 비롯해 부산과 진도 정도의 남해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선이다. 부산에서는 꾸돔 혹은 깨돔, 전남에서는 썩썩이라고 불린다. 표준어로는 군평서니라고 하는데 주로 구이로 해 먹는다. 생김 모양은 조기와 비슷하다. 크기는 어른 손바닥만 하다. 통으로 노릇하게 구워 고

춧가루, 실과 등을 넣어 만든 간장소스를 끼얹어 먹는다. 비린내가 전혀 없는 데다 살집이 두꺼워 씹는 맛이 있다. 흰 속살에는 고소한 맛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 뼈와 내장도 다 먹을 수 있는데 씹새름한 맛이 난다. 금풍생이의 별명은 '셋서방 고기'. 살이 연하고 고소해 남편이 아닌 셋서방에게만 몰래 갖다 줄 정도로 맛있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다.

서대회 · 게장백반은 꼭 한 번은 드세요

목포 사람들이 손님에게 홍어회를 대접하듯 여수 사람들은 서대회를 대접한다. 서대는 청정해역인 여수 여자만과 붓돌바다에서 자망으로 잡는 물고기. 가자미와 비슷하게 생겼다. 1년 이상 발효시킨 막걸리로 만든 천연식초를 사용해 비린내가 적고 담백한 맛이 난다. 밥에 속속 비벼 먹어도 맛있다.

여수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식당 간판이 '게장백반'을 하는 집이다. 봉산동에는 아예 게장거리가 만들어져 있다. 여수 앞바다에서 나는 돌게로 게장을 만든다. 양념게장을 먹을까 간장게장을 먹을까 하는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게장백반을 시키면 고추장 양념을 듬뿍 넣은 양념게장과 채소 듬뿍 넣어 끓인 간장게장, 된장으로 맛을 낸 된장게장이 수북하게 담긴 그릇이 나온다. 여수 게장백반이 왜 유명한지, 게장을 왜 밥도둑이라고 하는지 먹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짤 것 같은데 짜지 않고 달 것 같은데도 달지 않은 맛이 묘하다. '게 눈 감추듯' 밥 한 그릇을 후다닥 비우게 된다. 게 껍데기까지 씹어 먹는 맛이 일품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게장이 무한리필이라는 것. 여수 와서 이 맛안 보면 두고두고 후회한다.



교동시장. 여수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천국의 아이들〉 소외된 학교 문제아들 사회에 해결책을 묻다

교육개혁, 소외된 학생들, 학교폭력, 박홍식 감독의 영화 〈천국의 아이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키워드들이다.

이 영화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찌든 처음으로 제작에 참여한 작품인지 모른다. 진보를 표방하는 박노현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제작비를 댔다는 점에서 화제가 될 수 있다. 교육청이 나서서 영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실상을 고발하고 청소년문제를 예술매체로 풀어 보고자 한 의도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글 정재형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오프앤프리 확장예술제 조직위원장)

영화는 문제아 정훈(박지빈), 성아(김보라), 병민(이지웅) 등의 학생들을 새로운 교장이 반을 꾸려 신입 기간제교사 유진(유다인)에게 맡기면서 시작한다. 여선생 유진은 비록 중학생이지만 거칠고 제멋대로인 이들 '문제학생'을 당해 낼 재간이 없다. 온갖 모멸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이들이 공부 말고 취미활동을 열심히 하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뮤지컬을 구상하게 된다.

공부에 치이고 폭력에 짓눌리고

제일 먼저 유진에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은 성아다. 성아는 엄마가 엔벤조선족인 중국집 딸이다. 정체성에 혼돈을 겪던 성아는 유진 덕에 그나마 위로를 받는다. 정훈은 축구를 잘하지만 욕하는 성격이 강해 폭력으로 팀에서 축출된 학생이다. 병민은 여성성이 강해 남자들 사이에서 왕따로 불린다. 이 밖에도 틈만 나면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것 좋아하는 몇몇 친구가 있다. 이들 모두는 학습부진아들, 즉 문제아로 분류된다.

이들이 공부 안하는 건 인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의지나 목표부재의 문제도 아니다. 이 영화가 지적하는 것은 환경이다.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등교시간 엄수는 규율이라는 굴레를 인간이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킨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을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문제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천국의 아이들〉은 계몽의 시각을 준다.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몰아 간다. 대학 가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풍토. 그런 사회 속에서 이들이 하는 노래, 춤, 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뮤지컬도 공부처럼 열심히 하려니 이들은 역시 하기 싫어한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다. 음성 서클 선배들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그들로부터 도망치기는 불가능하다. 그들은 턱없이 많은 돈을 걷어 오라 시키거나 담배 심부름, 구타를 일삼는다. 점점 선도되어 가는 기미를 보여 교장도 지도선생도 좋아하던 즈음 마침내 구제불능의 폭력 서클 선후배관계가 장애로 등장한다. 폭력이 싫어 '잠수'를 탄 학생, 분열된 멤버들. 결국 뮤지컬 공연은 무산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하고 만 교사 유진. 그러나 뒤늦게 누군가 신청해서 경연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다음 아닌 수줍어하는 아이 병민이었다. 숫기라곤 전혀 없는 남자아이 병민은 나지막한 소리로 웅얼거리듯이 자신의 심사를 풀어내는 노래 같지 않은 노래를 불러댄다.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사 내용에 다른 모든 참가자들과 객석은 눈물바다가 된다. 일상의 진솔함을 드러낸 새로운 뮤지

컬의 탄생! 힘을 얻은 멤버들은 다시 모이고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뮤지컬로 무대를 달군다. 그렇게 영화는 해피엔딩이다.

영화 속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폭력 서클은 폭력으로 막을 수는 없다. 적발해 내고 선도할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공부로부터 이탈한 학생들을 조종한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입시교육에서 이탈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기 일쑤다.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포섭하는 것이 음성 서클이다.

지금의 학교는 입시지옥 외에도 폭력이라는 또 다른 지옥을 제공한다. 이 두 지옥의 대안은 자유로운 취미활동 보장과 폭력조직 근절이다. 문화예술활동을 오락으로만 활용해선 안 된다. 그것을 통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난이나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줘야 한다. 폭력조직 소탕 문제는 적발, 선도하는 데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소외된 학생들을 학교가 먼저 관심을 갖고 치유 노력을 하는 것이다.

뮤지컬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해피엔딩

공부로부터 이탈하는 학생들이 계속 생기는 한 폭력조직은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소모임이 있을 수 있다. 주변인들이 무관심하고 가담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그저 소규모로만 웅성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주변인들이 그들에 동조하게끔 조성되는 환경이다. 그건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 그들을 동조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다.

영화는 계몽의 시각을 준다.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다는 희망과 의지를 심어 준다. 하지만 계몽의 시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영화는 낭만적으로 현실의 개혁을 요구하지만 계몽의 시선만으로 교육개혁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개혁은 좀 더 꼼꼼하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의지만 갖고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가족력’을 보면 가족 건강이 보인다



가정주부 한모(40)씨는 최근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우울해 있다. 유방암 2기다. 수술도 받고 항암치료도 세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런데 한씨의 이모(52)도 유방암 환자였다. 유방암은 폐경 후에 많이 걸리는데 이모는 폐경이 오기 전에 유방암에 걸렸다. 통상적인 암 발생 나이보다 일찍 암에 걸렸다. 그럴 경우 ‘암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글·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

대학교수 권모(50)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매일 먹고 있다. 그는 작년에 협심증으로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뇌혈관이 좁아져 뇌졸중으로 목숨을 잃었다. 혈관에 동맥 경화가 잘 오는 심혈관 질환 가족력 집안이다. 하지만 권씨는 중년이 되어 불어난 체중을 줄이는 데 무관심했고, 담배를 끊지 못했다. 알고도 당한 경우다.

이처럼 집안 내력을 보면 그 집 식구들이 유난히 잘 앓는 병이 있다. 이를 가족력이라고 한다. 의학적으로 조부모에서 자식까지 4대에 걸쳐 사촌 이내에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가 2명 이상이면 가족력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위암이고 사촌형이 위암이면, 그 집안은 ‘위암 가족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10%는 이처럼 집안에 암 환자 또는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대에 걸쳐 같은 질병 2명 이상엔 ‘가족력’

가족력은 치매·우울증, 심지어 ‘허리 디스크’ 등 거의 모든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관심이 높은 병은 역시 암(癌)이리라. 어머니·자매·딸 등 직계 가족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유방암 발생 위험성이 2~3배 높아진다. 대장암의 5~20%는 유전적 요인으로 생긴다. 가족 중 1명이 난소암일 경우 없는 사람에 비해 난소암 발생 확률은 약 3배 높다. 폐암 발생의 유전적 요인은 장기간 흡연한 것과 같은 비중으로 다뤄진다. 위암의 10%도 가족력을 배경으로 한다. ‘암 가족력’이 있으면 암 검진을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가족력이 아니더라도 가족끼리는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을 공유하기 쉽다. 그런 면에서 심장병·뇌졸중·고혈압·당뇨병 등 이른바 성인병에도 가족력이 무시될 수 없다. 엄마가 비만이면 딸도 뚱뚱해질 확률이 2~3배 높고, 아빠의 혈압이 높으면 아들이 고혈압 환자가 될 확률이 3배 올라간다. 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하면 자식들도 고기를 잘 먹고, 아버지가 운동을 안 하면 아이들도 움직이지 않는 식이다. 가족력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생활습관을 공유하는 가족 문화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을 식습관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요즘에는 식습관이 질병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필



대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대장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사진·조선DB

먹느냐에 따라 20~30년 후 질병 발생 패턴이 확확 바뀌기 때문이다.

짜고 삭히고 절인 음식을 먹던 ‘전통 한국인’에게는 위암이 많지만, 그들이 미국에 이민 가 낳은 2세대들은 지방질 과잉 섭취로 대장암에 대거 걸린다. 이탈리아의 경우 야채와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 남부 지역이 목천 음식을 많이 먹는 북부보다 암 발생이 적다. 민족적 체질보다 우선인 것이 음식이다.

온 가족이 함께 올바른 건강습관 만들어야

이런 맥락에서 가족들이 어떤 질병에 노출돼 있는지는 냉장고를 보면 알 수 있다. 냉장고 안이 고기·버터·베이컨 등 고지방 음식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는 ‘대장암·심장병 냉장고’이다. 그런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냉장고라는 뜻이다. 젓갈·장아찌·절인 생선이 가득하면 ‘위암·고혈압 냉장고’가 된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청량음료·초콜릿·아이스크림 등이 눈에 먼저 들어오면 소아비만 냉장고인 셈이다.

반면 신선한 야채와 과일, 요구르트, 두부·콩 음식으로 꽉 차

있으면 ‘항암 냉장고’가 될 것이다. 계란·우유·살코기 등 철분과 칼슘이 많은 음식이 그득하면, ‘성장클리닉 냉장고’가 된다.

부부가 음식 문화를 공유하다 보니, 심장병을 일으키는 대사증후군을 남편 또는 아내 한 명이 앓을 경우 배우자가 그 병에 걸릴 확률은 ‘정상 부부’보다 29~32% 높아진다(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 대개 나이가 들수록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공유하는 추세를 보인다. 질병도 부창부수(夫唱婦隨)요, 부전자전(父傳子傳)인 셈이다.

가족 전체가 무병장수하려면 가족 간에 무슨 질병이 어떻게 분포됐는지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질병 가계도는 가족의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퇴치하는 작전지도다. 이를 토대로 우리 가족은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가족이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검증해 보자.

유전성과 생활습관 등을 공유하는 가족은 질병이 대물림되고 전염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올바른 건강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권력을 쥔 관료로 축제의 유혹 마다한 '청백리'는 선비의 표상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다. 유교에서 제일로 모시는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추구한다' 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글깨나 읽는 양반 지식인들은 모두 군자가 되기 위해 이익, 즉 돈이나 부를 좇지 않고 의를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그래서 청백리란 명예로운 이름이 생겨났다.
글·김경미 (시나리오 작가)



양반도 인간인지라, 게다가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입신의 기회, 즉 관직이 오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만큼 주어진 권력 탓에 자기도 모르게 혹은 스스로 묵인하에 아랫 사람이 혹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축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도하게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남용하다 들기면 적리 혹은 장리로 찍히고 후손들마저 벼슬살이를 할 수 없었던 탐욕은 달콤하고 뿌리 깊어 조선시대 공직자의 부정은 참으로 여러 기록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소인들 사이에서 관직에 올라 권력을 가지고도 이를 남용하지 않고 돈을 멀리하며 가난하지만 끝내 의를 추구했던 관리들을 뽑아 '청백리'라 하고 이들을 칭송했다.

조선시대 청백리는 기록에 의하면 총 217명으로 그 선발기준은 관직수행 능력,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갖추어야 했다. 청백리에 선출되면 그 후손들도

혜택을 받아 관직에 음직으로 오를 수 있었다. 음직이란 조상의 음덕으로 관직 자리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벼슬 자리 하나 얻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웠던 조선시대에 청백리에 선출되는 것은 본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청백리 선출은 본인과 가문의 영광

청백리는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조선에 들어서와서부터였던 것 같다.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2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사간원의 수장이 청백리 후보를 천거하고 임금의 이를 재가하면 의정부에서 심사하여 뽑았다. 그 선발인원은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그때그때 달랐다. 조선 중기 성리학 교리에 비교적 철저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했을 때는 성리학 이론을 생활에 실천하여

청렴결백하게 산 관리가 많았는지 선발된 청백리 수도 많았는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청백리라는 이름은 조선 전기에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붙였지만, 점차 살아 있는 사람에게 청백리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 하여 엄근리(청렴하고 근면한 관리)라고 불렀다가, 특별한 과오 없이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다 죽으면 청백리라고 높여 불러 주었다.

조선시대 청백리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는 맹사성·황희·최만리·이현보·이황·유성룡·이원익·김장생·이항복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흔히 말하듯 찢어지게 가난하여 평생을 멍석 위에서 자거나 지붕에 물이 새어 비가 오면 집안에서 우산을 쓰고, 우산이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는 등의 전시적 에피소드가 많다.

그러나 사실 청백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면면에는 과연 청렴결백하게 살았을까

의구심이 드는 인물도 상당수 있고, 그리고 이들 모두가 관료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엔 어땠는지 몰라도 적어도 관직에 있을 때는 녹봉을 받았을 터이니 전해지는 에피소드만큼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러한 전시적이고 극적인 에피소드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성룡의 이야기가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유성룡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임진왜란 때 도체찰사(都體察使)로 군무를 총괄, 이순신, 권율 등 명장을 등용하여 국난을 극복한 명재상이다. 풍산유씨 명문가 출신으로 그는 거의 한평생이라고 할 만큼 계속 관직에 있었고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 자리까지 올랐다.

그래서 그는 고향 안동에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한양살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양에 사는 동안 관직에 있을 때는 나라에서 마련해 준 집에 살았지만, 권력의 부침으

로 잠시 관직에서 물러날 때면 기거할 집이 없어이는 스님의 절에 머물렀다고 한다.

반대당도 인정한 청백리 유성룡

유성룡이 처음 관직에 올라 서울에 왔을 때 훗날 청백리로 복신되는 이준경이 그에게 서울에 큰 장토(집과 땅이 딸린 농장)를 마련하라고 충고하였다고 한다. 이때 유성룡은 이준경의 말을 청렴한 관료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유성룡은 평생 한양에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했고 고향 안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늙어 안동으로 낙향했을 때도 변변한 집 한 칸이 없어 가문에서 마련해 준 정자에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저 유명한 저서 《징비록》을 썼다.

유성룡에 대한 현실적이고 매우 정치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는 그가 관직에서 물러날 때 대간들이 그가 부정축재하여 여기저기 후한의 동탁과 같은 넓은 장원을 마련했다

고 탄핵한 사건이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단 질러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이 횡행했는데, 유성룡도 이런 허위고발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그만 관직 하나에도 부를 쓸어담는 자가 부지기수인 관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유성룡이 그만한 재산을 숨겨 두지 않았겠냐는 것이 대간들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틀렸다. 유성룡은 은퇴 후 매우 가난하게 살았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 탄핵이 나올 무렵 유성룡은 이항복의 추천으로 청백리에 천거되었는데, 당시 봉당간 갈등이 치열할 무렵 유성룡의 탄핵 사건은 분명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었음에도 반대당에서 아무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유성룡은 별 반대 없이 청백리가 되었다. 반대당에서도 트집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실제로 가난했던 것이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올해 꿈은 런던의 '여왕'

'요정'은 '여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손연재(18·세종고)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른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리듬체조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글·성진혁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2010년 세계선수권 32위였던 손연재는 지난해 프랑스 몽펠리에 세계선수권에서 11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싹을 보였다.

런던 올림픽을 앞둔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손연재는 4월 말 열렸던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시리즈 러시아 펜자 대회 후프에서 28,050점(30점 만점)으로 동메달을 땀다. 한국 선수로는 첫 월드컵 메달이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종목별로 25점대 안팎에 머물렀는데, 이젠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룰 수준으로 올라섰다. 특히 28점대는 일류 선수임을 가리키는 잣대로 통한다.

손연재는 5월 초에 열린 월드컵 시리즈 불가리아 소피아 대회 리본 종목에서도 3위를 했다. 특히 소피아 대회는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중 유일한 A급 대회였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8위 안에 든 국가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었다. 세계 최강인 예브게니야 카나예바(22·러시아)와 세계 2인자로 꼽히는 다리아 콘다코바(21·러시아)를 비롯해 지난해 세계선수권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10명 중 7명이 참가했다. 국제대회에 꾸준히 출전하며 좋은 성적을 거둔 덕분에 손연재의 국제체조연맹 5월 세계랭킹은 5위가 됐다. 지난해 랭킹 19위에서 14계단이나 올라갔다.

월드시리즈서 잇달아 좋은 성적 올려

손연재는 그동안 다른 종목에 비해 리본에서 고전했는데, 소피아 대회에선 메달까지 걸며 자신감을 얻었다. 개인종합 곤봉에서도



손연재는 곤봉을 제외하고 후프, 볼, 리본에서 처음으로 28점대를 받아 세계 상위권 선수 반열에 올랐다. 사진·조선DB

올 들어 가장 좋은 점수를 냈다.

올림픽에선 개인종합으로만 금·은·동메달의 주인공을 가린다. 런던 올림픽 개인종합 결선(10명) 진출을 노리는 손연재로선 종목별로 고른 기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연재는 펜자 대회에선 개인종합 4위, 소피아 대회에선 개인종합 7위를 했다.

리듬체조는 그동안 유럽, 중앙아시아 선수들의 전유물로 통했다. 동양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체형(팔다리의 길이나 비율), 유연성 면에서 뒤져 국제 대회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내기 어려웠다. 한국보다 리듬체조 저변이 훨씬 넓은 일본도 세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수층이 얇고 인프라가 부족한 한국에서 손연재의 선전은 신선한 느낌이 든다.

일부에선 손연재가 실제 국제 경쟁력에 비해 지나치게 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의 상품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유명 연예인 수준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과대 포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다른 '비인기' 야마후어 종목에서 세계 정상권에 오른 한국 선수들은 소외감을 맛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손연재의 인기엔 분명히 동경이나 환상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스포츠이면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리듬체조의 특성과 관련이 크다.

단순 비교엔 무리가 있지만 '김연아 신드롬'과 맥을 같이하는 부분도 있다. 피겨스케이팅 유망주에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챔피언까지 오른 김연아(22·고려대)는 국민 스타, '여신(女神)' 대접을 받는다. 피겨 역시 리듬체조처럼 운동능력과 예술성을 겸비해야 한다. 김연아는 주니어 무대에서 시니어로 올라가자마자 단숨에 세계정상권에 진입했고, 시니어 4년 차였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일인자가 됐다.

손연재는 김연아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아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바람직하다. 전지훈런지인 러시아의 노보고르스크 센터에서 엘레나 니표도바 코치의 지도로 꾸준히 기량을 쌓고 있으며, 국제 대회에 자주 나가면서 심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외국 심판들은 손연재를 더이상 아시아의 유망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집중력, 연기력,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엘리트 선수



손연재는 올 2월 모스크바 리듬체조 그랑프리대회 후프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사진·대한체조협회

로 본다.

프랑스 체조연맹(FFG)에서 펴내는 체조·리듬체조 전문잡지 <짐나스트 매거진(Le Gymnaste Magazine)> 4월호는 표지모델로 손연재를 선정했다. 이 잡지는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4페이지에 걸쳐 인터뷰 기사와 사진 등을 실었다.

런던올림픽 결선진출 집중력에 달려

손연재는 또 외국의 강호들과 실전 경험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야 하는지도 배워 가고 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나아가는 정신력, 승부 근성을 갖춰야 한다. 손연재가 역대 최고의 한국 선수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손연재에겐 이번 런던 올림픽이 선수 생활의 중대 전환점이다. 목표로 삼은 결선 진출을 이루기 위해선 실수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불이나 곤봉 종목에선 수구를 놓치면 감점이 크다. 물론 세계적인 강자들도 종종 큰 실수를 한다. 지난해 카나예바는 곤봉을 놓쳐 개인종합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있었다. 콘다코바도 소피아 월드컵 곤봉 결선에서 실수를 저지르며 최하위로 떨어졌다. 기술의 성공률과 뛰어난 안무 외에도 실수하지 않는 집중력을 갖춰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손연재는 4년 후인 2016년엔 22살이 된다. 부상 같은 변수가 없다면 선수로서 절정에 오를 시기이다. 이번 런던 올림픽을 세계정상권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메달 획득도 꿈이 아니다.

전자책은 패스트푸드 독서식탁 메뉴 넓혔다

미래 독서문화와 전자책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책을 둘러싼 환경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종이책만이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스마트패드), 전자책 전용 단말기, 기타 휴대 단말기 등 각종 기기로 전자책(e-Book)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육성으로 녹음된 책이나 TTS(Text To Speech) 기능으로 책을 읽어 주는 오디오북을 음악처럼 듣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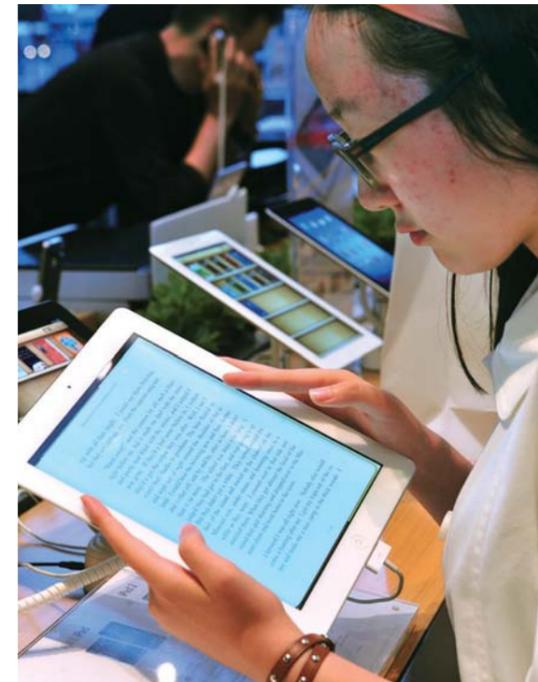
글·백원근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사진·서경리 기자

전자책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여러 매체 양식으로의 확장성, 업데이트와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장점이다. 독자 입장에서 물리적 공간이나 책을 입수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책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진 점, 글자 크기 조절이나 메모·사전 등 편리한 기능이 적지 않다. 이처럼 전자책은 종이책과는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어서 새로운 책의 형태로 주목을 받아 왔다.

전자책도 함께하는 다매체 공존시대

전자책 독서는 이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자책 독서율(지난 1년간 전자책을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성인 16.5%, 초·중·고 학생 50.2%로 젊은 세대일수록 전자매체로 읽는 '스크린 독서'에 친숙하다. 만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전자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83.5%나 되지만,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의 월평균 독서량(8.3권)이 평균치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전체 성인은 월평균 1.4권, 학생은 월평균 3.8권의 전자책을 읽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자책이 대세가 되고 종이책은 점차 사라질 것인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종이책이 사라진다고나 대부분의 사람이 전자책으로만 독서하는 일은 상당 기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종이책은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 또한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장시간 책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독성이 높고 눈의 피로도가 낮아 신체적 궁합이 잘 맞는다. 숨쉬기는 입으로도 가능하지만 역시 코로 하는



전자책 독서는 이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년간 전자책을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은 성인 16.5%, 초·중·고등학생 50.2%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는 스마트라이브러리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스마트라이브러리는 자료 열람, 좌석 예약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관이다.

것이 제격이듯, 일반적으로 쾌적한 독서 조건으로 종이책을 당해낼 전자책 기기는 아직까지 없다. e-잉크를 채용한 단말기들의 경우 '스크린 독서'의 이물감을 많이 해소시켜 주기는 하지만 종이에 인쇄된 선명한 글자의 편안함을 느끼기는 어렵다.

즉 종이책이 보통의 식사라면, 전자책은 보조적인 간편식이나 패스트푸드에 비유할 수 있다. 물론 전자책은 종이책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나 동영상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장르 등 감각적인 표현 방법, 독자들 간에 또는 저자와 독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쌍방향 형식의 '소셜 리딩'과 같은 다양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책이라도 원하는 형태의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말하자면 종이책만 있던 식당 메뉴에 여러 전자책이 등장하여 이용자인 독자의 선택지가 확대된 것이다.

종이책과 전자책이 공존하는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책을 주로 선택하게 될까.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외신에는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4월 15일자)>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남캘리포니아대학(USC) 연구팀이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자책 단말기 소유자 가운데 10% 정도만이 종이책 읽는 것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자의 21%가 킨들이나 누크 같은 전자책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종이책을 읽는다는 것이다. 전자책 단말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독서할 때는 종이책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준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선호한다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의 다른 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독서매체 변화보다 독서습관이 문제

출판시장의 10% 이상을 전자책이 차지할 만큼 돌출적으로 전자책이 발달한 미국이나, 아직 전자책 시장 비중이 2~3% 안팎 수준인 우리나라나 대다수 선진국들에

서 공통적인 현상은 '시간 보내기에 적당한 오락적인 콘텐츠(킬링 타임 콘텐츠)'가 전자책 독서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과 만화가 대표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종이책으로는 발행되지 않는 로맨스소설 등 이른바 '장르소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도서가 전자책 콘텐츠로 전환되어 서비스되는 비율이 낮고, 기기 간의 호환성 확보도 미진하다.

사이버 공간, 온라인·디지털 환경이란 본질적으로 오프라인 세상의 필요성이 연장된 것이다. 모바일 콘텐츠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스마트폰으로 통화나 문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고 오락을 하며 책을 읽는다.

전자책을 읽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도 스마트폰을 통해서인데, 대체로 종이책을 읽던 사람들이 전자책도 읽는다. 또한 소설을 읽던 사람들이 전자책으로 소설을 읽고, 경제경영서를 읽던 사람들은 전자책으로도 경제경

영서를 읽는다. 독서는 책의 내용(콘텐츠)을 읽는 행위이므로, 내용은 같고 이용 방식만 달라진(다양해진) 환경에서 독자의 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독서인구가 줄고 있고, 가구당 도서관비도 하락하는 등 책에 쓰는 시간과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전자책 환경이 될수록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동 중에도 따라다니는 동영상의 물결과 인터넷 중독, 갈수록 시간적·정신적 여유 없이 각박해지는 현대인의 일상에 책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선된 지식과 정보,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책과 벗하는 '독서의 습관화'야말로 개인이나 사회 발전의 요체임에 틀림없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 역시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다.

올해는 마침 정부가 정한 '독서의 해'이다. 직장에서 한 달에 한 권씩 정해 독서토론회를 열면 좋을 듯하다.

전자책을 맘껏 보고 싶다면 정독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서 무료 대출

전자책 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일부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공도서관 이용을 권하고 싶다. 종이책처럼 전자책도 무료로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독도서관 등 전국 각지의 공공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의 경우 전자책 2,500여 종, 웹 콘텐츠 1,676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읽을 수 있는 전자책 대출이 급증 추세라고 한다. 이 기회에 지역 공공도서관에 가족과 함께 이용자 등록을 하고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빌려 읽으면 어떨까.

나만의 전자책을 만들고 싶다면 교보문고 등 '1인 출판 서비스' 이용하세요

출판사에서 큰 돈을 들여 만드는 종이책과 달리, 개인이 제작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1인 출판 전자책이 인기다. 아마추어 저자들의 등용문인 셈이다. 개인적인 신변잡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면 전자책 판매에 따른 수입과 종이책 제작 기회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의 '퍼플', 전자책 오픈마켓인 '유페이퍼', 마이디파트의 '북씨', 조선일보사가 운영하는 '북스토어', KT의 '올레북' 등에서 개인 저자를 지원하는 1인 출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비전문가들이 편리하게 전자책을 만들어 등록할 수 있도록 제작 툴과 판매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교보문고의 경우 6(저자)대 4(교보)의 비율로 판매 수익을 분배한다. 전자책 1인 출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를 준비하는 일.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내용 못지않게 맞춤법과 교정 교열에도 신경을 써서 텍스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전자책으로 만든 후에는 주문형 인쇄출판(POD) 서비스를 이용해 몇 권의 종이책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저자 사인'을 넣어 선물하면 잊지 못할 기념이 될 것이다.

‘사회의 독버섯’... 불법사금융 척결 나섰다

정부, 합동신고처리반 설치... 전국민 대상 불법사예 신고 접수

정부가 서민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선포하고 잇달아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어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가 상당 부분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불법고금리 대부업체와 사채업자,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와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접수된 신고 처리를 위해 금감원 내에 금감원·검찰청·경찰청·캠코·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등 관계자 100명으로 구성된 합동신고처리반이 설치됐다. 합동신고처리반은 피해상담 후 곧바로 수사외의 및 피해구제에 착수하며, 경찰청은 이를 즉시 수사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검찰청은 대검 형사부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5개 지검(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지검과 지청(53개)엔 전담검사를 지정했다.

경찰청도 전국 16개 지방청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징수,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대대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도 신고된 불법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금감원과 지자체는 피해신고 빈발업체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소금융 등 저소득층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을 위해 금융서비스 이용절차도 강화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사용자 본인이 지정한 단말기(최대 3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하게 했다. 또 300만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는 수취계좌 입금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연인출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 나섰다. 사진·조선DB

제를 도입했으며,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시간 이후 입금을 의무화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에서 맞춤형 서민금융 정밀상담을 실시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소금융 지원규모를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바퀴드림론 등 서민대출과 대환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신용회복 성실이행자를 위한 소액대출도 확대하고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실직 등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6개월간 생계·의료·교육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저소득층 재정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글·권세진 기자



경쟁은 ‘인간 존재의 이유’



러쉬 | 토드 부크홀츠 지음 | 창림출판 364쪽 | 1만5,000원

11년 전, 티베트를 여행한 적이 있다. 티베트는 제임스 힐턴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나오는 이상향(理想郷) 샹그릴라라고 일컬어지는 곳.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질곡과 가난이었다.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멈춰 서면 새카만 얼굴의 소년들이 달려와 ‘원 달러(One dollar)’를 외쳐댔다. 그들을 보면서 나이 지긋한 일행 한 분이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6·25 직후에 우리나라가 딱 저랬어!”

그러나 여행사에서는 여전히 ‘티베트’를 샹그릴라라고 포장해서 팔아먹고 있다. 중국 윈난성(雲南省)의 한 마을은 ‘샹그릴라’라고 이름을 바꾼 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현대사회의 경쟁에 지친 인간들이 쉬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다시 꺼내 읽고, 티베트의 산골 마을 라다크를 ‘오래된 미래’라며 동경한다. 히말라야 산자락의 빈국(貧國) 부탄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가 히트를 친 적도 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한 템포 늦추고 살아라!” “느리게 살아라!” 이런 주장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250여년 전 장 자크 루소도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치지 않았던가?

이 책은 그런 흐름에 감연히 맞서 “행복은 휴식과 여유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

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뇌(腦)과학이나 행동경제학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한다. ‘전두엽’을 갖고 있는 인간은 원래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며, 이를 위해 경쟁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저자는 “자족하는 이는 더 현명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세월의 때만 늘어날 뿐이다”라고 말한다.

‘위로’가 화두인 시대에 던지는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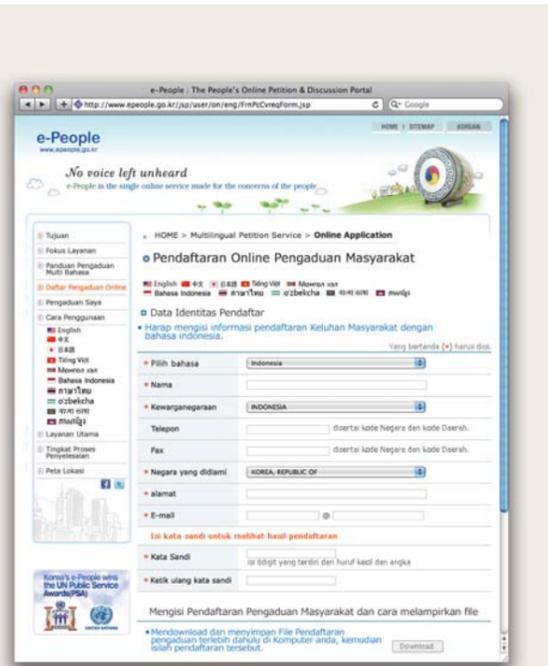
저자는 ‘경쟁이 없던 옛날이 좋았다’고 외치는 자들을 ‘에텐주의자’라고 꼬집으면서, 세상을 소로가 찾아갔던 월든호수로 바꾸려 한다면 삶의 질은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짧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돌아갈 수 없는 에텐을 갈구하며 질질 짜고, 경쟁사회가 주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현재에 안주하려 들기보다는, 스스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도전하면서 경쟁을 즐기라는 것이 저자는 주장이다.

경쟁이 이 세상을 더 팍팍하게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자는 단호하게 반박한다. “인정사정없는 이 지상의 삶과 포식자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하려면 다른 인간과 협력해야 했다. 결국 경쟁이 협력을 낳았다. 경쟁은 우리 인류를 비참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토대다.”

데카르트가 했던 말을 살짝 바꿔서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경쟁한다. 고로 존재한다.”

글·배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정부와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직자가 승진 또는 신규임용 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내부정보로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를 뿌리뽑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에 한국어로 민원신청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부터 온라인 국민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한국어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해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어가 서툰 우리 국민이 한국어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온라인상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한국어로 답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창구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10개 국어로 개설돼 있다. 재외동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해당국가 언어로 민원을 신청하면 우리나라의 소관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답변을 해당 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받아볼 수 있다.

중앙행정심위, 지방순회 구술청취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5~6월 경북·울산·대전·충남지역에서 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한다. 중앙행정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통한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정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방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작년 부터 실시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이다. 순회구술에는 중앙행정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들이 출석해 행정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다. 청구인들의 진술은 중앙행정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올해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전국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충북(7월) ▲전남·광주(9월) ▲전북(10월) ▲제주(11월) ▲강원(12월).

'국민권의 소식지' 인터넷 서점에서 무료 제공

영풍문고, YES24, 대교LIBRO, BANDI&LUNI'S, 알라딘 등의 인터넷 서점(홈페이지 및 eBook 앱)에서 권익위의 격월간 소식지 <국민권익> 등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서점 전자책 연합(주)한국이퍼브와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에서 제작하는 주요 발행물은 영풍문고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된다.



권익위는 지난 5월 11일 국민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한 조사관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작은 소리로 크게 들었습니다>를 발행했는데, 이 또한 인터넷 서점 전자책 코너에서 검색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제4기 대학생 청렴홍보단 발대식

국민권익위원회 제4기 대학생 청렴홍보단이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했다. 대학생 80명으로 구성된 제4기 청렴홍보단은 6개월간 UCC와 웹툰 제작과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해 전파하는 일을 맡게 된다. 또한 활동 종료 후에는 성과보고 회의를 거쳐 최우수팀 전원에게는 위원장 상장과 해외 청렴 선진국 탐방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밖의 우수, 장려상 수상팀에도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 매뉴얼 발간 배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할 수 있는 630여 개 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공개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등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①행정·감독 및 지방자치단체 ②수사기관(검찰 및 경찰 등) ③공공단체(공사 및 공단) ④국회원과 기업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공익신고 접수·조사·처리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방법,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상금(최고 10억원) 등 각 공익신고 기관의 담당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공익침해 행위의 유형 및 신고자 보호방법 등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해 기관마다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절차와 방법이 달라 생기는 혼선이나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알지 못해 생길 수 있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위험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매뉴얼은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자료>부패방지>부패방지정책'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고충처리국 페이스북에 놀러 오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에서는 별도의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sosmyright)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고충처리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면 그 주의 고충민원과 해결 미담사례, 이동신문고 순회상담 소식, 조사관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을 소개하고 친구 맺기와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다. 6월부터는 각종 돌발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고충처리국에서는 트위터(twitter.com/korea_ombudsman)를 통해서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김영란 위원장, 일일 민원상담원 나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일일 민원상담원으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민원인을 맞아 내공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제기한 아파트 재계약 요구 관련 민원을 청취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응모마감 6월 30일).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민원AS(에프터서비스) 기관'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해 준 박재영 부위원장 인터뷰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알게 된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조선·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요즘 여행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국민권익>의 여행 기사를 통해 사진으로나마 매화와 벚꽃을 만끽했습니다. 마치 꽃 속에 묻혀 있는 느낌이 들 정도였네요. 입원해 계신 엄마도 흐드러진 봄꽃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알찬 여행과 문화 기사는 물론이고 늘 발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국민권익>이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071안·대전 서구)

다양한 정보가 실린 <국민권익>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발굴해 시정해 나가는 권익위의 활동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듯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독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생생하고 진솔한 내용을 수필이나 시로 투고할 수 있도록 독자문예란 등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으면 합니다. 또 외국에 권익위원회와 비슷한 기관이 있다면 그 역할과 기능을 소개해 주면 좋은 읽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필순·부산 북구)

지난 호 퍼즐 정답

1 병	2 목	현	상	3 수
	적			4 청
5 종	지		6 원	탁
이		7 기	자	
8 학	교	폭	력	
		제		

<국민권익> 3+4월호를 읽고 93명의 독자분이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동신문고와 현장조정 현장 르포를 통해 국민신문고의 활동을 상세하게 알게 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미술시대와 '시네마 토크'를 재미있게 읽었다는 평가도 많은 분이 내려주셨습니다. 독자분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국민권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 퍼즐 정답자와 의견 채택된 분

이꽃섬(전남 여수시) 정경식(대전 중구) 강상철(서울 서대문구) 조월제(경북 울진군) 이옥수(충북 제천시)

P U Z Z L E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로

- 법률이나 규칙을 좇아 지키는 일
- 큰 탈이 없이 편안하고 한가로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 "공직자의 0000한 태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자산리 영취산에 있는 절.
-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
- 악을 물리치고 선을 복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하는 것.
-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

세로

-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해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며, 서로 뜻이 통하니 오해가 없습니다.
- 직장. "마침내 000를 얻었습니다."
-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목수.
-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의 하나. 골수, 지라, 림프샘에서 만들어지죠.
- 이론과 인식을 뛰어넘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짓!

6월 14일부터 전국 공공행정기관에서

110 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0수화통역사 송현채 상담원

